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化와 東北亞秩序

—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Ⅳ —

1993. 8.

申 相 振 (國際研究室·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報告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 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서 發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序 文

1992년 鄧小平의 「南巡講話」 이후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을 가속화하여 경제력 증대를 모색하는 동시에, 해·공군력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군사력 현대화 작업을 적극화하고 있다.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가속화하여 경제력과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고 체제안정을 이룰 경우, 중국은 1990년대 동북아질서 재편과정에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영향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고, 미국도 역내 배치 미군을 점차 감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바,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 증강은 일본의 역할증대 움직임과 더불어 동북아 신질서 형성과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동북아질서 재편과정에서 중국이 중대한 역할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에서는 중국의 개혁·개방 가속화가 대외정책에 어떻게 투사될 것이며 동북아 신질서 구축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는 1990년대 동북아질서 예측과제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본 연구가 1990년대 동북아질서 및 통일환경 변화의 예측에 도움이 되고 통일정책 입안에 기여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1993. 8.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要 約

第 I 章 序 論

대내 개혁·개방정책을 가속화하여 경제력과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고 체제안정을 이룩할 경우 중국은 1990년대 동북아 질서재편 과정에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의 개혁·개방 가속화는 중국의 對한반도정책 변화를 수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중국의 개혁·개방 가속화는 동북아질서 재편과정 및 한반도정세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본 연구는 중국의 개혁·개방 가속화가 1990년대 동북아질서 변화와 한반도의 안보 및 통일환경에 미칠 영향을 분석·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第 II 章 中 國 的 改 革 · 開 放 政 策 : 現 狀 과 前 望

1. 개혁·개방정책 기초

가. 정책목표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채택 추진하는 일차적인 목표는 경제발전을 통해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력을 증대시킴으로써 현정권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유도하고 사회주의체제를 유지·공고히 하는 데에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장기목표는 경제력 등 신장된 종합

국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증강하여 南沙群島와 釣魚臺列島 등에 대한 영유권을 확보하고, 홍콩과 대만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고, 역내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중국은 금세기 말까지 국민총생산액을 1980년의 4배로 증대하는 등 「小康段階」를 실현하고자 하고, 중국공산당 건립 100주년까지(2021년)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여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건립 100주년인 2050년까지는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여 중진경제국으로 도약하고자 하고 있다.

나. 정책방향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은 경제적으로는 「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 확립 기치하에 자본주의의 장점을 대폭 수용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이념을 견지해 나가는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① 중공업위주의 평등지향정책 보다는 국민생활 수준 향상과 소비재공업 위주의 성장지향정책을 채택하고 ② 농업부문에서 시작하여 도시기업부문으로 범위를 확대하면서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고 ③ 대내 경제개혁과 대외 경제개방을 동시에 추진하고 ④ 연안지역을 우선 개방하고 점차 개방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군사·안보적으로는 걸프전과 구소련의 붕괴 이후 나타나고 있는 전략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군의 전문화·현대화·정규

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해·공군력 증강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행정효율 제고를 위한 당·정기구 개편과 간부 제도 개혁 등 극히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개혁을 허용하고 있다. 중국은 서방에서 통용되고 있는 자유화나 민주화 등 진정한 의미의 정치발전을 위한 목적 보다는 중국공산당과 현정부의 정당성 확보와 사회주의체제 유지·강화를 위한 목적과 한도내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2. 개혁·개방 현황

가. 경제

농촌경제 부문의 개혁은 영농제도의 개선, 농업부산물 가격의 자유화 및 농촌공업의 육성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농가생산책임제 실시 등 영농제도 개혁으로 중국 농촌지역에서 자유시장이 급증하고, 자유시장에서의 가격결정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 또한 농촌 여유자금과 잉여 노동력은 「鄉鎮企業」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여 농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하였다.

도시기업부문에 있어서도 중국은 노동계약제 실시,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 축소, 주식제 도입 등 자본주의 경제요소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경영효율 제고를 도모하여 왔다. 또한 중국은 가격체제와 유통체제 및 금융제도 개혁 등을 통해 경제효율 제고를 기하여 왔다.

아울러 중국은 경제특구 설치와 대외 경제관련법 정비 및 무역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외국투자를 유치하고 대외무역을 확대하여 왔다. 중국은 1992년까지 341.6억 달러에 달하는 외자를 도입·활용하였으며, 1992년 대외무역 총액이 1656억 달러로 확대됨으로써 11대 교역국(1978년, 32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통제, 종신 고용제 존속, 이중가격제도 실시, 도·농간 소득격차 및 부정부패 등은 경제개혁의 문제점이 되고 있다.

나. 군사

중국은 南沙群島의 영유권 확보, 대만 통일과정에서 유리한 환경 조성, 일본의 해군력 증대 등에 대비하는 것을 1990년대 안보정책의 핵심 목표로 인식하고 있는 바, 중국의 군사·안보전략은 「연안방어전략」에서 「원양방어전략」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안보전략에 의거, 중국은 현대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군조직을 개편하고 군 장비를 현대화하는 등 군사력 증강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결프전 이후 중국은 군 장비현대화 필요성을 절감하여 러시아 등으로부터 수호이 27 전투기와 디젤잠수함 등을 구입하여 해·공군력 증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1989년 이후 중국은 군부의 단결과 사기 진작 및 군사력 증강을 위해 국방예산을 매년 12%(동기 예산 증가율은 약 8%) 이상 증액하고 있다. 특히 1993년에는 국방예산을 전년대

비 14.8%나 증액(약 73억달러)하였다. 더욱이 중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국방예산이 실제 국방비 지출액의 50%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군수산업의 민수품 생산에서 얻어지는 이익도 대외무기 구입 등 국방비로 전용되고 있다.

다. 정치

경제개혁·개방정책을 순조롭게 추진하여 「物質文明을 建設」하기 위해서는 사상과 정치적 보증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중국은 「思想解放」 등 「精神文明 建設」을 주장, 과거 통치이념이었던 마르크스·레닌주의-毛澤東사상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치개혁은 어디까지나 사회주의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사회주의체제를 더욱 발전시키는데에 그 목적이 있는 바, 정치개혁은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 국한하여 추진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중국의 정치개혁은 당·정 기구 개편과 행정관리체제 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서방식 다당제나 의회제도 등 진정한 민주화와 자유화는 수용하지 않고 있다.

경제건설을 위한 환경조성 차원에서 취해지고 있는 당·정개혁 조치는 지도기구의 축소개편, 행정권한의 하방 및 집단지도체제 구축 등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개혁조치를 통해 행정효율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후계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경제개혁·개방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보장하고자

하고 있다.

3. 개혁·개방 전망

가. 경제

중국은 2000년대 중반까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진경제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대내적으로는 산업구조 조정과 경제효율 제고를 위한 조치를 단행해 나갈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무역체제를 개선하고 개방지역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중국경제는 국영기업의 비효율성, 정부 재정적자의 누적, 최근 과잉투자로 인한 인플레이 재발 가능성과, 1989년 조정정책 이후 농업생산 둔화 및 산업구조의 비합리성 등의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중국경제 개혁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10년동안 중국은 최소한 7%의 경제성장율을 유지하여, 21세기초 중국 국내총생산액(GDP)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경제가 이와 같은 추세로 성장할 경우 21세기초 홍콩과 대만 등을 포함한 중국은 세계 최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鄧小平 사후 예상되는 정치불안 및 중국경제의 부조적 불합리성 등으로 볼 때, 1990년대말까지 중국이 선진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나. 군사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중·장기 목표가 동아시아에서 지역 강대국으로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데 있는 바, 계획대로 경제력을 신장시킬 경우 중국은 군사력 증강을 위한 행보를 더욱 적극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혁·개방정책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군부의 지지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바, 이를 위해서도 중국은 국방예산을 증액하고 군사 현대화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원양방어전략에 부응하기 위해 해·공군력 현대화에 중점이 두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개혁·개방정책이 성공하더라도 1990년대 중국이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군사대국으로 부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첫째, 군사력 증강에 요구되는 경제력의 제약, 둘째, 경제건설을 위해 주변국과 선린관계 유지 필요, 셋째, 연안지방 등 경제발전에 의해 혜택을 입은 지역과 국민들이 군사보다 경제를 우선시하고 있는 점 등이다.

다. 정치

중국의 현 지도부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공고히 할 수 있는 첩경은 정치민주화 보다도 경제발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현정권에 대한 국

민들의 지지를 유도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과거 대만과 한국의 경우처럼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치 민주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정치개혁은 鄧小平 등 혁명 제1세대가 존재하는 「4項 基本原則」의 범위내에 국한되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경제개혁·개방이 심화될수록 중국에서는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신념이 약화되고 국민들 사이에서 정치적 자유와 민주화 요구가 증폭될 것이다. 경제개혁 과정에서 소외당한 지식인과 내륙지역의 농민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불만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으며, 西藏 등 회교도 자치구에서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요구가 증폭될 것이다. 또한 지역주의화 현상도 중국의 분열을 조장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개혁·개방에 따르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공산당의 정당성과 권위 약화와 맞물려 나타날 것인 바, 중국 정치체제의 변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체제안정 유지 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鄧小平 등 원로의 사후 예상되는 권력승계문제도 중국 정치체제 변혁의 동인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체제붕괴의 위기에 봉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鄧小平 등 혁명 제1세대의 생존이 중국사회주의 체제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다. 둘째, 1989년 천안문사건의 교훈으로 중국정부는 체제에 대한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대응력을 강화하게 되었다. 셋째, 경

제발전에 의해 이익을 보게된 대다수의 중국 국민들이 기존질서의 파괴는 毛澤東時代의 경제적 빈곤과 文革과 같은 사회적 혼란을 재발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넷째, 중국공산당이 군부와 공안기관을 효율적으로 장악하고 있다는 점 역시 중국 사회주의체제를 안정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섯째, 전통적으로 중국 국민들이 「天下大亂」을 원하지 않고 안정을 선호하여 왔으며, 중국내 소수민족이 8%에 불과하며 소수민족문제가 통제 가능한 상태에 있다. 여섯째, 강력한 중앙정부하에서 군사현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군부가 지방분권화를 적극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第三章 중국의 개혁·개방이 동북아질서에 미칠 영향

1. 개혁·개방 가속화와 대외정책 전개 방향

개혁·개방정책이 가속화됨에 따라 중국은 대외정책에서 이념보다 경제적 실리를 더욱 강조하게 될 것이며,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전방위 외교」를 전개하여 국제무대에서 영향력 확대를 모색할 것이다. 중국은 경제건설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평화로운 주변환경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국과의 선린관계 유지·강화를 핵심 외교정책 노선으로 간주할 것이다. 서방의 對中 「和平演變」 전략으로 인한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중국은 일본 등 주변국과 선린관계를 강

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혁·개방에 따른 부작용이 심화될 경우 보수세력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수파의 득세는 대외협력을 중시하는 지방정부의 권한 약화를 초래하는 반면,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시킬 것이다. 중국지도부의 보수화는 중국으로 하여금 대외 강경노선을 채택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개혁·개방정책이 성공하여 경제력과 군사력이 신장될 경우에도 중국은 민족주의 기치하에 대외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1989년이래 중국이 군사비를 대폭 증액하고 있는 이유가 지역 강대국으로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그러나 1990년대까지 중국이 대내 경제건설을 최우선시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중국은 당분간 대외 팽창지향적 태도를 보이기 보다는 대내문제 해결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2. 동북아질서에 대한 중국의 인식

가. 안보질서

중국은 1990년대 동북아질서가 다극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중국의 안보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동북아질서의 다극화 추세가 중국으로 하여금 역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동북아에서도 미국의 패권정치가 계속되고 있으며, 일본의 역할증대 움직임과 영토분쟁, 대만문제 및 북한 핵문제 등이 잠재적 지역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나. 경제질서

중국은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국가들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으며 당분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향후 동북아를 포함한 아·태지역 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증대되고, 세계무역의 중심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지역으로 이동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미국경제는 침체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 등 경제공세가 적극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미국과 역내 국가간 경제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국가간 이념대결의 종식과 과학기술의 진보로 인하여 국가간 경제적 상호 의존관계가 심화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입각, 중국은 「全方位 對外開放」 방침하에 외국과의 경제교류를 적극 확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지역경제 불력화 현상이 1990년대 국제경제질서의 중요한 특징중의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동북아에서도 세계적인 지역경제 불력화에 대비하기 위해 경제블럭 형성 움직임이 적극화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중국은 역내 경제권이 폐쇄성을 띠기 보다는 개방적 지역주의라는 구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3. 1990년대 중국의 동북아정책

가. 정책기조

1990년대 중국의 동북아정책 기조는 첫째, 대내경제 건설을 위한 개혁·개방정책 수행에 유리한 주변환경을 조성하고, 둘째, 경제력과 군사력 증강을 통해 역내에서 강대국으로서의 영향력을 유지·확대하는 것이다.

나. 정책내용

1990년대 중국은 동북아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역내 강대국에 대해 사안에 따라 협력과 경쟁을 병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은 미, 일, 러 등 강대국간 상호 견제를 통해 역내 세력균형을 기하고 지역분쟁 해결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의 패권정책에 반대하면서도 미국에 대해 갈등관계를 심화시키기 보다는 가능한한 협력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관계개선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중국의 대일정책은 경쟁적 공존의 구도속에서 전개될 것이다. 중국은 국가안보

및 대미, 일 견제를 위해 러시아와 선린관계 유지 필요성을 갖고 있는 바, 중·러간 정치·군사·경제적 협력관계가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4. 동북아질서 재편과정에 미칠 영향

가. 정치·안보질서

중국은 미, 일 등 선진 경제국과 경제협력을 발전시킬 필요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도 미, 일과 안보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당분간 중국은 주변국과도 협력적인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마찰을 피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중국의 현실적이며 타협을 중시하는 외교정책은 지역안정 유지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90년대말까지 중국이 미국이나 러시아에 필적할 수 있을 만큼 첨단무기로 무장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울러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방세력과 대부분의 국민들도 군사력 증강이나 대외 팽창정책 보다는 경제력 신장과 대외 협력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개혁·개방 가속화는 동북아 정치·안보질서 재편과정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혁·개방정책 가속화에 따라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

약화, 지방분권화, 부패, 경기과열 등 부작용과 혼란이 심화될 경우 군부를 비롯한 보수성향의 지도자들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지도부의 보수화는 중국으로 하여금 대외 강경노선을 채택하도록 유도하여 지역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개혁·개방정책이 성공하여 중국이 경제·군사적 강대국으로 부상할 경우에도 중국은 대외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다. 특히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南沙群島 등 南海와 東海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시킬 것이며, 일본 등 지역국들의 군비증강을 자극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개혁·개방 가속화가 장기적으로 동북아질서 불안을 야기하는 잠재요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경제질서

중국의 경제개혁·개방정책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중국과 지역국간 교역이 확대되고 한국과 일본 자본의 대중국 투자가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중국과 지역국간 경제적 상호의존관계 심화는 지역경제 통합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지역에서는 경제발전 정도의 차이와 상호 상대방에 대한 경계 등으로 인하여 유럽공동체와 같은 형태의 제도화된 경제권이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의 개혁·개방 가속화와 이에 따른 경제력 신장은 장기적으로 중국과 역내국가간 경제적 경쟁을 유발시킬 가능성

도 있다. 특히 역내 경제협력체 형성과정에서 중국과 일본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립할 가능성이 있고, 미국과 유럽 등 지역에서 시장확보 문제와 관련 중국과 역내국가간 경쟁이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가속화는 동북아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역내국가간 경제협력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第Ⅳ章 중국의 개혁·개방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과 한국의 대응

1. 한반도문제에 대한 중국의 기본입장

현재 경제발전을 위해 주변정세의 안정을 희구하고 있고,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증대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한반도문제가 동북아질서 안정에 미칠 영향이 심대할 것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중국은 한반도가 가지는 전략적 가치를 중시할 것이다.

중국은 주한 미군이 한반도 및 동북아질서의 안정유지 세력으로 기능하고 있는 측면도 있으나, 냉전체제의 와해로 더 이상 주둔 명분이 없으며 중국의 이익을 저해하는 측면이 더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주변국의 핵개발을 자극하는 등 역내질서를 위협할 것으로 판단,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반대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문제와 관련,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이 가져올 불확실한 미래를 우려하여 한반도 통일의 조기 실현 보다는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통한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향후 대일 견제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강력한 통일한국이 출현하는 것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2. 중국의 대한반도정책 전망

가. 중국과 북한관계 변화 가능성

향후 중국은 남북한에 대해 등거리정책을 채택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받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중국과 북한관계의 변화가 예상되며, 중국은 한국과 경제·정치적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중·장기적으로 중국과 북한의 고위 지도자간 유대관계 약화가 예상되며, 중국은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정치·경제적 지지나 지원정책을 수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동북아 및 한반도에서 영향력 증대를 꾀하고 있는 중국은 당분간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고려하여 북한과 정치·군사적 협력관계를 경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 중국과 한국관계 발전 전망

한·중 수교와 14차 중국 공산당대회 이후 중국과 한국간 경제교류가 대폭 확대되고 있으며, 경제교류의 축적을 바탕으로

신뢰감이 형성되어 한·중은 정치·외교적으로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모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또한 장기적으로 한국을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증대에 대한 견제카드로 활용하고자 한국과의 정치적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역내에서 일본이 정치 및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할 경우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이 증대될 것인 바, 중국은 한국과 정치·군사적 협력관계까지도 모색·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3. 한국의 대응

안정적인 주변환경속에서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동시에 한국주도하에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국정부는 경제·군사적으로 강대한 중국의 출현에 대비 다음과 같은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은 군사 현대화를 통해 국방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최근 역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다자간 안보협의체 형성 노력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중국의 군사위협을 견제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함으로써 한·중간 경제적 보완관계를 유지하고,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은 親韓的이며 대외협력 지향적인 중국내 개혁과

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중국의 개혁·개방이 북한의 경제개혁·개방으로 이어지도록 중국과 공동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중국이 한국의 경제 경쟁상대국이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은 국내기업의 무분별한 對中 투자를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과의 경협도 중·장기적 차원의 대중 경제관계를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한국은 한·중 정기각료회의 추진 등 공식 협력채널을 통해 중국의 개혁·개방에 따르는 지역안보, 경제 및 환경문제 등을 원만하게 처리하는 동시에 한국주도의 한반도 통일이 중국의 이익에 위배되지 않을 것임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目 次

序 文

要 約

第Ⅰ章 序 論 1

第Ⅱ章 中國의 개혁·개방정책: 현황과 전망 4

1. 개혁·개방정책 기초 4

가. 정책목표 4

나. 정책방향 8

2. 개혁·개방 현황 12

가. 경제 12

나. 군사 24

다. 정치 31

3. 개혁·개방 전망 42

가. 경제 42

나. 군사 48

다. 정치 51

第Ⅲ章 中國의 개혁·개방이 동북아질서에 미칠 영향 ... 56

1. 개혁·개방 가속화와 대외정책 전개 방향 56

2. 동북아질서에 대한 중국의 인식	60
가. 안보질서	60
나. 경제질서	64
3. 1990년대 중국의 동북아정책	67
가. 정책기조	67
나. 정책내용	70
4. 동북아질서 재편과정에 미칠 영향	81
가. 정치·안보질서	82
나. 경제질서	84
第Ⅳ章 중국의 개혁·개방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과 한국의 대응	88
1. 한반도문제에 대한 중국의 기본입장	88
2. 중국의 대한반도정책 전망	91
가. 중국과 북한관계 변화 가능성	92
나. 중국과 한국관계 발전 전망	97
3. 한국의 대응	98
參考文獻	103

第 I 章 序 論

1992년초 鄧小平이 심천, 주해, 상해 등 중국 남부지역을 시찰(1. 18~2. 21)하면서 발표한 「南巡講話」는 1978년 이래 추진해온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을 질적으로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鄧小平은 “시장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이 아니며, 자본주의에도 계획이 있는 것처럼 사회주의에도 시장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언급하면서 개혁·개방정책을 가일층 심화·확대할 것을 역설하였다.

鄧小平의 「南巡講話」 정신은 중국공산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14차 당대회)에서 黨의 공식 노선으로 채택되었으며 제8기 전인대에서 국시로 헌법에 명시되었다. 중국은 「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 확립을 통하여 생산력을 증대하고,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력을 신장시킴으로써 현지도부와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유도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지난 14년 동안의 개혁·개방 결과 축적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국은 해·공군력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군사력 현대화 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대내 개혁·개방정책을 가속화하여 경제력과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고 체제안정을 이룩할 경우 중국은 1990년대 동북아 질서재편 과정에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91년 구소련의 붕괴로 러시아의 영향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고, 대내 경제회복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미

국도 역내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을 철수하거나 감축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바,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 증강은 일본의 역할중대 움직임과 더불어 동북아 신질서 형성과정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의 개혁·개방 가속화는 중국의 對한반도정책 변화를 수반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중국은 역내 경제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증시하게 될 것이다. 한국과의 경제협력 심화는 한국의 자본과 기술 도입 확대 뿐만 아니라 일본의 對中 경제지원을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등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또한 개혁·개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변환경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 북한이 비현실적인 정책을 포기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설득하여 왔으며, 개혁·개방정책이 가속화됨에 따라 동북아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북한의 정책에 보다 강력한 반대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 심화는 결국 북한의 개방 유도과 남북한관계 진전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중국의 개혁·개방 가속화는 동북아질서 재편과정 및 한반도정세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본 연구는 중국의 개혁·개방 가속화가 1990년대 동북아질서 변화와 한반도의 안보 및 통일환경에 미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전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목표와 방향을

검토하고, 개혁·개방 현황과 전망을 경제, 군사·안보, 정치분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이와 같은 중국의 대내 개혁·개방정책 가속화가 대외정책 노선에 어떻게 투사될 것인가를 분석하기로 한다. 특히 과도기에 처해 있는 동북아질서에 대한 중국의 기본 인식은 어떠한가, 이러한 인식에 입각한 중국의 동북아정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분석·전망하기로 한다.

셋째, 중국의 개혁·개방 가속화가 동북아의 정치·안보질서 및 경제질서 재편과정에 미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전망하기로 한다.

넷째, 한반도문제에 대해 중국이 견지하고 있는 기본 입장을 분석해 보고, 남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책조정 내용과 폭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중국의 개혁·개방 가속화에 따라 예상되는 역내질서 변화와 중국의 對한반도정책 변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第Ⅱ章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현황과 전망

1. 개혁·개방정책 기초

가. 정책목표

(1) 「中國式 社會主義」 건설

중국의 지도자들이 개혁·개방을 사회주의 제도를 완성시키고 발전시키는 과정이라고 누차 언급하여 왔던 바와 같이,¹⁾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채택·추진하는 일차적인 목표는 경제발전을 통해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력을 증대시킴으로써 현정권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유도하고 사회주의체제를 유지·공고히 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국은 기존의 경직된 사회주의 이론의 속박에서 탈피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中國式 社會主義」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다. 鄧小平의 주장에 의하면, 「中國式 社會主義」의 근본적인 임무는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국민의 물질적·문화적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다.²⁾ 鄧小平은 이러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문화대혁명시기와 같은 폐쇄정책을 중단하고 대내 개혁과 대외 개방정책을 추

1) 江澤民, “加快改革開放和現代化建設步伐,爭取有中國特色社會主義事業的更多勝利,” 「文匯報」(香港), 1992. 10. 13.

2) “建設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 鄧小平, 「建設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香港: 三聯書店香港分店, 1985), pp. 31~35; 魯凡之, 「中國經濟改革與調整」(香港: 銀域有限公司, 1986), pp. 7~8.

진할 것을 역설하였다.

개혁·개방정책의 목표로 제시되고 있는 「中國式 社會主義 建設」 이론은 「社會主義 初級段階論」을 통해서 정립되었다. 「社會主義 初級段階論」은 1981년 중국공산당 제11차 6중전회에서 통과된 「歷史決議」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으며, 1987년 13차 당대회에서 趙紫陽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趙紫陽의 13차 당대회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은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물질적 토대인 생산력과 상품경제가 낙후되고 발달되지 못한 상태(社會主義 初級段階)에 있기 때문에 현단계에서 다양한 사영경제와 개체경제를 허용·장려하여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또한 「社會主義 初級段階」에서의 핵심적인 과제는 계획과 시장을 유기적으로 결합(社會主義 商品經濟)하여 계획경제의 경직성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³⁾ 이는 1978년 이래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개방정책을 합리화하는 이론적 기초로 작용하여 왔다.

1992년 봄 남부지역 시찰시 鄧小平은 「中國式 社會主義」 건설을 위해서는 생산력 발전,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그리고 종합국력 제고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강조하였으며,⁴⁾ 이러한 주장은 14차 당대회에서 당론으로 정식 채택되었다. 1997년까지 채택·추구할 정책방향을 결정한 14차 당대회에서 중국은 경제체제 개혁의 목표를 「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 확립

3) 趙紫陽, “沿着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建設,” 「明報」(香港), 1987. 10. 26.

4) “鄧小平南巡講話的二號文件,” 「爭鳴」, 1992년 4월號 (1992. 4), pp. 23~27.

을 통하여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⁵⁾ 「社會主義 商品經濟論」을 한단계 발전시킨 「社會主義 市場經濟論」도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의 기법을 과감히 도입한다는 것으로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병폐로 지적되어온 비생산성과 비능률성을 퇴치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이론이다.⁶⁾ 이를 통해서 볼 때, 중국의 현지도부는 냉전이후시대 국제질서에서 국가간 경쟁의 핵심이 경제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종합국력을 제고하는데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대내 경제발전이 사회주의 체제의 공고화와 국가의 안정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혁·개방정책을 합리화하는 이러한 이론에 입각, 중국경제는 1980년대 연평균 약 9%의 성장을 이룩하여 이미 기본적인 의식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溫飽段階」에 진입하였다. 1978년 이래의 개혁·개방 결과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중국은 14차 당대회와 8기 전인대에서 1990년대 연평균 경제성장 속도를 8~9%로 설정, 금세기 말까지 국민생산 총액을 1980년의 4배로

5) 鄧小平의 「南巡講話」를 인용, 江澤民은 “계획경제가 곧 사회주의는 아니다. 자본주의에도 계획이 있다. 시장경제가 곧 자본주의의 전유물이 아니다. 사회주의에도 시장이 있다. 계획과 시장은 경제 수단에 불과하다. 계획이 많은가 시장이 많은가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구분하는 본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江澤民, 앞의 글.

6) 張朝尊, 文力, “論社會主義市場經濟,” 「中國社會科學」, 1992年 第4期 (1992. 7), pp. 3~13; 羽泰豐, 李連仲, “社會主義市場經濟與資本主義市場經濟的異同,” 「人民日報」, 1993. 2. 5; 중국의 「社會主義 市場經濟」 이론 모색 과정에 대해서는 吳敬璉, “計劃與市場理論探索十四年,” 「瞭望」, 第46期 (1992. 11. 16), pp. 14~15 참조.

증대하는 등 「小康段階」를 실현하고자 하고 있다.⁷⁾ 나아가 중국은 중국공산당 건립 100주년까지(2021년)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확립하여 시장경제를 충분히 발전시키고, 국가건립 100주년인 2050년까지는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여 중진경제국으로 도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⁸⁾

(2) 지역 강대국으로서의 영향력 확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개방정책의 장기적 목표는 경제력 등 신장된 종합국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증강하여 南沙群島와 釣魚臺列島 등에 대한 영유권을 확보하고, 홍콩과 대만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고, 역내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중국은 1970년대 이래 국방 현대화를 4개 현대화의 하나로서 추진하여 군사력을 증강함으로써 중국의 주권을 보호하고 주변국에 대해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특히 중국이 해·공군력 증강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력 현대화를 적극화하고 있는 궁극적 이유는 臺灣에 대한 주권 회복, 「南沙群島」·「釣魚臺列島」 등에 대한 영유권 확보 및 미·리의 군사력 철수

7) 2000년까지 중국경제가 도달하고자 하는 「小康段階」는 국민의 물질적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단계를 의미한다. 중국은 「小康段階」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시 주민의 경우 1인당 연평균 소득이 2000元, 농민의 경우 1인당 연평균 소득이 1000元에 달해야 하고, 교육과 과학기술 및 시장경제가 일정 정도까지 발전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China News Analysis*, no. 1477 (January 15, 1993), p. 6.

8) 趙紫陽, 앞의 글.

이후 야기될 역내 세력공백을 자신이 메꾸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14차 당대회와 8기 전인대 1차회의에서도 중국은 국방력 강화를 1990년대 개혁정책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로 제시하였는 바,⁹⁾ 군사력 강화를 통한 역내 영향력 확대가 중국 개혁·개방정책의 장기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중국지도자들은 군사력 보다도 과학기술과 경제력이 냉전이후시대 국가간 경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으며,¹⁰⁾ 이러한 인식에 입각하여 경제개혁·개방정책을 가속화함으로써 경제력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경제력을 증강하려는 궁극적인 목표는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국익을 확보하고 위상을 강화하는 등 영향력을 신장시키는데 있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 중국은 지난 십여년 동안 축적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2000년 하계올림픽을 개최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러시아 등 구소련으로부터 첨단무기 구입 추진과 자체 무기개발을 통하여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나. 정책방향

「一個 中心(경제발전), 兩個 基本點(개혁·개방과 四項堅持)」이 중국 개혁·개방정책의 지침이 되어 왔다.¹¹⁾ 따라서 중국의

9) 江澤民, 앞의 글; 李鵬, “政府工作報告,” 「文匯報」, 1993. 3. 16.

10) 錢其琛, “回顧與展望,” 「人民日報」, 1992. 12. 30; 李長久, “世界主要戰場轉向經濟領域,” 「文匯報」, 1993. 1. 1.

11) “堅持四項基本原則,” 鄧小平, 「鄧小平文選(1975-1982)」 (北京: 人民出版社, 1983), pp. 144~70.

개혁·개방정책은 경제적으로는 「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 확립 기치하에 자본주의의 장점을 대폭 수용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이념을 견지해 나가는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중공업위주의 평등지향적 정책에서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소비재공업 위주의 성장지향적 정책으로 전환하여 1979년이래 연평균 약 9%에 이르는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첫째, 경제개혁은 농업부문에서 시작하여 도시기업부문에 범위가 확대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농민이 중국인구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점과 중국정치에서 전통적으로 농촌이 지니는 중요성을 감안, 중국은 개혁 초기 농촌경제 개혁에 역점을 두었다. 농촌지역의 개혁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게 되면서부터 중국은 도시기업부문의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1984년 10월 중국공산당 12차 3중전회에서 도시개혁의 적극 추진을 공식화함으로써 중국은 개인에게 사영기업 설립을 허가하는 등 공업과 도시부문의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¹²⁾ 또한 중국은 현재 3차산업 부문의 개혁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둘째, 초기 중국의 경제개혁·개방은 대외 개방에 역점이 두어

12) 1984년 10월 중국공산당이 도시개혁 추진을 본격화할 것을 결정한 후 취한 일차적인 정책은 문화대혁명시기 농촌지역에 하방되었다가 도시로 돌아온 젊은이들을 국영기업들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자 이들에게 개인소유나 집단소유의 「個體戶」라는 사영기업의 설립을 허가함으로써 실업문제를 해소하는 것이었다. Dwight H. Perkins, "Prospect for Economic Reforms," A. Doak Barnett and Ralph N. Clough, eds., *Modernizing China: Post-Mao Reform and Development* (Boulder, Colo.: Westview Press, 1986), p. 51.

졌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대내 개혁과 대외 개방이 동시에 추진되었다. 낙후된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외국의 자본과 기술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 중국은 특정 지역을 외국에 개방하기 시작하였다. 대내적으로 개혁정책 추진에 필요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은 선진 경제국의 협력을 유도하고자 했던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수출주도형 산업을 중점 육성하였다.

셋째, 중국은 전지역을 일시에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방하고 점차 개방의 범위를 확대해 왔다. 중국은 대외 개방정책 추진 결과 사회주의체제 유지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정 연안지역을 경제특구와 경제개방구로 지정하였고, 경제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대외 개방지역을 점차 기타 연안지역과 내륙지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1992년 5월 정치국회의에서 「전방위 대외개방」 노선을 채택하여 개방의 범위와 깊이를 확대·심화하고 있다.¹³⁾

중국은 또한 대내 개혁과 대외 개방정책 추진에 유리한 안보 환경을 조성하고 역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군의 현대화·정규화·전문화를 통하여 국방력을 증강하고 있다. 군사·안보분야의 개혁조치는 걸프전과 구소련의 붕괴 이후 나타나고 있는 전략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

13) 중국공산당은 鄧小平의 「南巡講話」의 지시를 실천하기 위해 1992년 5월 16일 정치국회의를 개최하여 「중양 4호문건」을 채택하였다. 이 문건에서 중국은 「전방위 개방」 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중양 4호문건」 전문은 「中國大陸研究」, 第36卷 第1期 (1993. 1), pp. 81~87 참조.

다. 육군은 국지전 수행능력과 기동타격 능력 확보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으며, 해군은 연안으로부터 900Km까지 방어한다는 적극 방어 개념하에 원양작전 수행 능력 제고에 주력하고 있고, 공군은 해군의 작전능력 범위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장비 현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중국은 정치분야의 개혁을 사회주의의 완성·발전을 위한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는 바, 행정효율 제고를 위한 당·정기구 개편, 간부제도 개혁 및 부정부패 척결 등 극히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정치개혁을 허용하고 있다. 중국지도부는 경제개혁의 심화를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치개혁 방안을 강구하였으나, 보수 원로지도층은 경제개혁과 개방정책 추진 결과 야기된 각종 부조리 및 병폐가 중국정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자극받아 정치개혁을 지연시켜 왔다. 보수 지향적인 원로지도층은 경제개혁 개방이 심화·확대될수록 그만큼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과 「반부르조아 자유화」를 강조하였다.

결국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치개혁은 서방에서 통용되고 있는 자유화나 민주화 등 진정한 의미의 정치발전을 위한 목적보다는 중국공산당과 현정부의 정당성 확보와 사회주의체제 유지·강화를 위한 목적과 한도내에서 전개되고 있다.

2 개혁·개방 현황

가. 경제

중국은 1979년부터 「人民公社」 해체와 「농가생산 책임제」 도입, 기업경영상의 시장기구 도입, 경제특구 건설 및 「三資企業」¹⁴⁾ 설립 등 획기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급속한 경제성장을 도모하여 왔다. 1992년 초 鄧小平의 남부지역 순시 이후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 방침하에 경제개혁을 더욱 심화하고 경제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국영기업의 경영 자주화 범위를 확대하고, 주식제를 확대 실시하는 등 자본시장을 적극 육성하고 있으며, 가격개혁을 심화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전방위 대외개방」 방침에 입각하여 개방지역을 내륙과 변경지역으로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대외무역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유리한 대외무역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 농촌경제 개혁

농촌경제 부문의 개혁은 영농제도의 개선, 농업부산물 가격의 자유화 및 농촌공업의 육성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영농제도 개혁과 관련, 중국은 1950년대 이래 실시해온 집단영농 방식

14) 三資企業은 외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를 촉진시키는데 주요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으며, 그 형태는 합자기업, 합작기업 및 외자기업으로 구분된다. 합자기업은 계약에 따라 권리, 책임, 손익을 부담하는 기업형태이며, 합작기업은 출자비율에 의거하여 수익을 배당하고 손익을 분담하는 형태의 기업이다. 외자기업은 100% 외국자본으로 설립되는 기업이다.

의 「人民公社」를 해체하고 농민에게 자유로운 토지 경작권을 부여해 주었다. 중국은 일차적으로 1979년부터 5년동안 각 농가에 일정의 농지를 할당해 주고, 농민은 할당받은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일정량을 공정가격으로 정부에 판매한 후 나머지를 자유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1984년에는 계약기간을 다시 15년 더 연장 받음으로써 농민들은 농업생산을 더욱 증대할 수 있게 되었다.

농가생산책임제 실시 등 영농제도 개혁으로 중국 농촌지역에서 자유시장이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들 자유시장에서의 가격결정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¹⁵⁾ 아울러 중국은 농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산물 가격을 점차 인상하였다. 1992년 7기 전인대 5차회의에서 개혁·개방의 가속화 방침을 정책으로 채택한 이후, 上海와 北京 및 廣東省 등 지역에서는 이미 식량판매 가격을 자유화하였으며, 현재는 16개 省의 800여개 지역에서 쌀과 면화 등을 제외한 식량가격을 자유화하였다.¹⁶⁾

농업부문의 개혁으로 농촌지역에 여유자금의 축적이 가능하게 되고 부농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여유자금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따른 잉여 노동력은 「鄉鎮企業」의 출현 가능하게 하였다. 현재 중국농민 일인당 경작면적이 3~4 마지기(1 마지기

15) 중국은 1985년부터 쌀, 보리, 밀 등 농산물에 대한 국가수매량을 점차 축소하고 국가배급가격을 인상하여 재정적자를 축소하는 동시에 농업생산 증대를 도모하고자 했다.

16) 「文匯報」, 1993. 2. 24.

200평)에 불과하고 방대한 유휴 노동력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바, 도시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鄉鎮企業」을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¹⁷⁾ 「鄉鎮企業」은 농촌의 공업화와 농민의 생활수준 향상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실업문제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¹⁸⁾

이와 같이 농촌지역에서 추진되어온 개혁은 농민의 생산의욕을 고취하여 농업생산의 증대를 가져왔다. 1979년부터 1991년까지 농촌총생산이 연평균 5.3% 증가(개혁정책 실시 이전의 연평균 증가율은 2.7%)하였으며, 농민소득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의 공업 우선정책, 공업화에 따른 경작면적 감소, 농산물의 생산과 판매의 국가통제에서 오는 구조적 모순 등으로 농촌지역의 소득수준이 도시에 비해 여전히 낮은 상태에 있다. <표 2-1>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의 확대는 지역간 성장 불균형 현상을 심화시켜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을 가속화하는 등 사회불안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¹⁹⁾

17) 田紀雲, “關於穩定農村基本政策的幾個問題,” 「人民日報」, 1991. 12. 23.

18) 「향진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약 1억에 육박하고 있으며, 1991년 「향진기업」의 생산액은 공업총생산의 40%에 이르는 9580億元, 수출은 총수출액의 20%인 122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19) 1985~89년 기간동안 농민의 연평균 수입증가율은 17.1%였는데 반해, 도시주민의 연평균 수입은 21%나 증가하였다. 도시와 농촌간 이와 같은 소득격차는 농촌지역 주민의 불만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어, 최근들어 농민소요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楊永年, “四川仁壽打槍事件詳情,” 「文匯報」, 1993. 6. 13.

<표2-1> 농촌·도시 주민의 일인당 연평균 소득

(단위: 元)

연 도	1978	1980	1985	1990	1991	1992
농 촌	134	191	398	686	709	784
도 시	316	439	685	1387	1544	1826

출처: 陳文鴻, “市場經濟在中國將出現什麼問題?” 「廣角鏡」, 1992年 12月號, p. 25; 中國國家統計局, “關於1991年國民經濟和社會發展的統計公報,” 「人民日報」, 1992. 2. 29; 鄒家華, “關於1992年 國民經濟和社會發展情況與1993年計劃草案的報告,” 「人民日報」, 1993. 4. 4.

(2) 도시경제 개혁

1984년 12차 3중전회에서 「경제체제개혁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켜 국영기업에 경영자주권을 대폭 확대해 줌으로써 도시경제 부문의 개혁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1986년부터 그 동안 주요 도시에서 부분적으로 실시해 오던 노동계약제를 국영기업 신규노동자 채용시 확대 실시하고, 공장장 책임제를 더욱 강화해 왔다. 아울러 1990년 이후 중국은 상해와 심천에 주식거래소를 개설하는 등 자본주의 경제요소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경영효율 제고를 도모하여 왔다.

그러나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 고용인원 과다, 합리적 사회보장제 미비 및 가격제도의 불합리성으로 인하여 국영기업의 경영실적이 저조할 수 밖에 없었다. 1991년의 경우 국영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73.5%(약 1억 4천만명)에 달하였던 반면 공업 총생산치에서 국영기업의 생산치는 52.8%에 불과하

였다.²⁰⁾

따라서 중국은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완화하는 한편, 국영기업 내부의 체질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980년대 중반이후 점차 평생고용제를 축소하고 노동계약제를 도입하였다. 중국은 국영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하여 경영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영책임제를 도입하여 공장장에게 기업경영의 책임을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에 대한 정부와 당의 간섭과 통제가 점차 약화되었으며, 기업이 스스로 손익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또한 중국은 국영기업이 비효율적인 경영체제하에 있는 주요 이유가 평생고용제를 채택해온 데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인식하여 「三鐵」²¹⁾ 타파 노력을 통해 국영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해 왔다.

1991년 9월 당 중앙공작회의에서 국영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개진된후 국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조치들이 취해졌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합병과 기업집단화를 허용하고, 「주식제기업시험방법」을 제정(1992. 6)하여 국영기업의 주식회사화를 모색하고 있다.²²⁾ 이러한 조치

20) 국영기업은 사영기업과 외자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낮고 채고누적 등으로 전체 국영기업의 1/3 이상이 적자상태에 처해 있다. 1992년의 경우 국영기업의 성장율은 14.4%에 불과하였으나, 집체기업의 성장율은 28.5%, 외자기업의 성장율은 48.8%에 달하였다. 國家統計局, “1992年國民經濟和社會發展的統計公報,” 「人民日報」, 1993. 2. 19; 曾樹基, “當前中國經濟存在什麼問題,” 「廣角鏡」, 1992年 12月號 pp. 16~21.

21) 이는 「鐵飯碗」(평생직장 보장제), 「鐵交椅」(평생직위 보장제), 「鐵工資」(고정월급제)를 의미한다.

22) 이와 관련, 중국은 주식 상장 허용대상 기업을 광둥, 복건, 해남성 등 3개지역 기

는 민간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1992년말 기준 중국에는 약 14만개(1991년 대비 28.8% 증가)의 사영기업이 존재하고 있으며, 사영기업의 영업범위도 교통·운수, 과학·기술, 정보산업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기업내부 체제개선 이외에도 기업의 외적 환경개선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가격체제 개혁 필요성을 인식, 가격관리 기능을 지방정부와 기업에 상당부분 이양하여 주었으며, 이로써 중국에는 국가계획가격 이외에 국가지도가격과 시장가격이 병존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개혁 가속화 방침에 따라 국가가 직접 가격을 결정하는 비중이 대폭 감소되고 있다. 사회상품 소매총액중 국가가 가격을 결정하는 비중이 1991년 21%에서 1992년에는 10%로 감소하였으며, 생산재 가격과 교통·운수비중 국가통제가격이 1991년말 737종에서 1992년말에는 89종으로 감소되었다. 나아가 생필품 가격의 자유화 범위를 확대(현재 2/3 이상의 생필품 가격이 시장에 의해 결정됨)하고, 석유가격도 국가계획가격에서 국가지도가격으로 전환하였다.²³⁾

또한 중국은 국영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통체제를 개선하고, 금융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지방재정 수입을 확대하고 기업

업에서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1992년 1년동안 363개 국영기업이 주식회사화하였다. 朱白樺, “各省可在滬深在股票,” 「文匯報」, 1993. 1. 3; “China to Widen Stock Trade but Cut Issue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anuary 4, 1993; Wu Naitao, “1992: From Planned to Market Economy,” *Beijing Review*, January 11~17, 1993, p. 14.

23) 陳銘, “中國價格改革邁大步,” 「文匯報」, 1992. 12. 25.

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였다. 중국에는 현재 소비재 시장, 생산재 시장 및 각종 도매시장이 설립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현물거래와 선물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주식, 보험 및 각종 유가증권 등 자본시장이 설립되기 시작하여 기업의 자본조달이 보다 용이하게 되었으며, 복식예산제 도입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의한 분세제 실시 등 재정개혁을 통해 중북투자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성을 극복하고자 하고 있다.²⁴⁾

한편 도시경제 개혁의 일환으로 중국은 3차산업 발전을 위주로 한 산업구조 조정을 모색하고 있다. 3차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1978년 11.7%에서 1991년에는 18.9%로 증가하는 등 3차 산업의 비중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나, 중국은 여전히 3차산업의 비중이 낮은 상태이다. 1992년 중국은 「3차산업 발전에 관한 결정」을 공포한 바 있고, 江澤民도 14차 당대회 보고에서 3차산업 발전이 경제현대화의 주요 지표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중국에서는 금융·보험업, 교통·통신업, 정보업 및 여행업 등이 급속히 발전되고 있으며, 2000년까지 국민총생산중 3차산업의 비중을 약 1/3 이상의 수준으로 제고하고자 하고 있다.²⁵⁾ 중국이 3차 산업을 적극 육성하려는 목적중의 하나는 도시의 잉여노동력을 흡수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지난 십여년 기간동안의 개혁 결과 도시경제 부문

24) Zhang Zhiping, "Reform of China's Financial and Accounting System," *Beijing Review*, December 7~13, 1992, pp. 14~17.

25) 張龍, "中國現代化若干目標分析," 「中國社會科學」, 1992年 第3期 (1992. 5), pp. 107~08; 劉江, "我國第三產業發展出現新局面," 「人民日報」, 1992. 12. 26.

에 있어서도 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현저하게 완화되고 시장경제 요소가 상당부분 도입되었다. 그러나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통제, 종신 고용제 유지 그리고 이중가격제도 실시 등으로 인한 시장기능 왜곡과 부패만연 등으로 인하여 도시경제 개혁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대외경제 개방

중국은 경제중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폐쇄정책을 지양하고 서방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대내 경제개혁 촉진을 목적으로 중국이 추진해온 대외 개방정책은 경제특구 설치와 대외 경제관련법 정비 및 무역제도 개선 등을 통한 외국투자 유치와 대외무역 확대에 중점을 두고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방정책 결과, 중국은 1992년까지 341.6억 달러에 달하는 외자를 도입·활용하였으며, 1992년 대외무역 총액이 1656억 달러로 확대됨으로써 11대 교역국(1978년, 32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다.

(가) 개방지역 확대

중국의 대외개방은 1979년 이래 광둥성과 복건성 등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1980년 5월 중국은 광둥성의 심천, 주해, 汕頭市와 복건성 하문시의 일정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광범위한 무역자주권을 부여해 주었으며, 1984년 상해

와 천진 등 14개의 연해도시와 해남도를 추가 개방하였고, 1985년에는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그리고 민남삼각주를 개방 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아울러 1987년 13차 당대회에서 중국은 대외 개방지역을 더욱 확대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러한 결정에 따라 1988년 해남도를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외국기업에게 토지사용권을 허용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왔다.

1989년 천안문사건으로 개방정책이 일시적으로 위축되었으나, 1990년 상해 「浦東地區」를 경제특구에 준하는 개발구(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한 바 있고, 天津(1991. 5)과 大連(1992. 5) 및 廣州(1992. 6) 등도 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하여 대외무역과 외자유치를 촉진하고 있다. 1992년에는 당 중앙 4호문건을 통해 「전방위 대외개방」 방침을 확정하여 개방지역을 내륙과 변경지역으로 확대하고 있다.²⁶⁾

아울러 경제특구 등 개방지역은 개발초기 단계에 관광업과 호텔건설 및 가공업에 외국의 투자가 집중되었으나, 최근에는 고도의 과학기술 분야와 금융, 교통 운수 등 3차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의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1990년 심천과 상해 등지에 증권거래소가 설립된 바 있으며, 1992년 2월부터 외국인에게 주식시장을 개방하고 있다.²⁷⁾ 이는 중국의 대외개방이 범위와 정도면에서 모두 대폭적으로 확대·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6) “中共中央關於加快改革,擴大開放,力爭經濟更好更快地上一個新階段的意見,”「中共中央文件: 中發(1992) 4號」.

27) 중국은 현재 내국인용 주식과 외국인용 주식(B 주식) 두가지를 발행하고 있다.

(나) 대외무역법 및 제도 개선

1978년 이래 중국은 대외무역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보완하고 대외무역 권한을 지방과 기업에 이양하는 한편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외개방조치를 취해왔다. 중국은 지난 10여년간 대외개방 조치를 통해 대외무역을 활성화하고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해 왔는 바, 그 주요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경제건설에 필요한 외자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대외무역 관련법을 정비하였다. 개방정책 추진 초기 외국인들의 대중국 투자를 주저하도록 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이 법제 미비였던 바, 중국은 「중외합자경영기업법」(1979. 7 제정, 1990. 4 일부 개정)·「합자기업법 실시세칙」(1983. 9 제정)·「수출입관세조례」(1985. 3 제정, 1992. 3 개정)·「합자기업의 외환수지 균형 문제에 관한 규정」(1986 제정)·「관세법」(1987. 7 제정)·「대만동포투자환경 장려에 관한 규정」(1988 제정)·「외자기업 통일소득세법」(1991) 등을 통해 외자도입 환경을 개선하였다. 중국은 현재 사회간접자본 건설 및 금융·관광 등 서비스분야(1992. 5)와 농업 등 1차산업(1992. 7)에까지 외국인에게 투자를 허용하는 대담한 개방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외국투자 유치를 위한 혁신적 조치 결과 1992년 1년동안 외국인의 대중 직접투자가 90억달러에 달하였다.²⁸⁾

28) 이는 1979~1987년 기간동안에 이루어진 외국인 투자 총액 보다 많은 액수이다.

둘째, 중국은 대외무역제도를 개선하여 대외무역을 증대시켜 왔다. 종래 중국에서는 국무원 대외무역부가 대외무역을 일괄적으로 관할해 왔다. 따라서 각성, 직할시 및 자치구 등 지방과 기업들은 수출입을 직접 결정·시행할 권한이 없었다. 그러나 1979년 이후부터 점차 각 지방과 기업에 대외무역 권한을 이양하고 무역경영책임제를 도입하였다. 이와 관련, 비교적 적은 규모의 외자도입 심사와 승인을 각 지방정부와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992년 鄧小平의 「南巡講話」와 14차 당대회 이후 중국은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대외무역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혁신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중국은 관세율을 가트가 규정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관세율 수준인 13~14%로 낮출 것을 목표로 1992년 관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한편, 수입허가 품목을 단계적으로 삭감하고 수입조절제도 폐지(1992. 4)하였다. 또한 중앙정부가 외환을 관리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해온 이중환율제(1981. 1)를 폐지하고 단일환율제를 실시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대외무역정책에 대한 서방의 불신을 해소함으로써 가트 가입과 대미 통상교섭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셋째, 중국은 국제경제기구 가입을 통해 세계 각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모색해 왔다.²⁹⁾ 경제건설을 국가의 중점목표로 설

29) 중국경제가 세계경제체제로 편입되고 있다는 데에 대한 설명은 Sheryl WuDunn, "China's Consumers Start to Make a Splash,"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February 16, 1993 참조.

정한 후 중국은 부족한 자본과 기술 도입을 위해 선진국과의 경제협력을 필요로 하였고, 이를 위해 국제경제기구와의 협력 확대를 모색하였다. 이와 관련, 중국은 1980년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에 가입하였고, 1986년에는 아시아개발은행에 가입하였다.³⁰⁾

아울러 중국은 1986년부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트)」에 옵저버로 참석하고 대외무역체제를 개혁하는 등 가트 회원국 지위를 회복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³¹⁾ 1992년 중국의 대외무역 규모가 1600억 달러로 확대되어 세계 11대 무역국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중국의 대외무역 총액중 약 85%가 가트 회원국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인 바, 대외무역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중국은 가트에 가입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중국 내 유치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금년내 가트 가입을 목적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시장개방과 완전한 시장경제체제 도입문제와 관련 미국의

30) 1980년 세계은행에 가입한 후 중국은 1981년부터 약 140억 달러에 이르는 차관을 도입하여 경제건설을 위해 사용하였다. 1992년에는 세계은행으로부터 25억달러에 달하는 차관을 도입하였고, 1993년에는 30억달러를 차관으로 도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Jim Mann, "How did China manage to borrow so much money?" *Korea Herald*, November 1, 1992, Harold K. Jacobson, Michel Oksenberg, *China's Participation in the IMF, the World Bank, and GATT*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0).

31) 중국은 23개의 가트 창립국의 일원이거나, 1950년 대만이 가트에서 탈퇴함으로써 중국은 회원국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만약 신규회원국 자격으로 가트에 가입할 경우 미국 등이 최혜국대우 부여시 예외 규정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회원국의 지위를 회복하는 형식으로 가트에 가입하고자 하고 있다. 唐貞浩, "關貿總協定的基本情況及與我國的歷史關係," 「瞭望」, 1992年 第42期 (1992. 10. 19), p. 11.

강경한 입장을 고려할 때, 중국이 금년내 가트에 가입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 되고 있다.³²⁾

나. 군사

국제환경에 대한 중국지도부의 인식 변화와 대내 경제발전예 따라 중국은 군사·안보정책에 있어서도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 南沙群島의 영유권 확보, 대만 통일과정에서 유리한 환경 조성, 일본의 해군력 증대 등에 대비하는 것을 1990년대 안보정책의 핵심 목표로 인식하고 있는 바, 중국안보의 일차적 관심은 변경방위 문제로부터 해양과 영공방위 문제로 전환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의 군사·안보전략은 「연안방어전략」에서 「원양방어전략」으로 전환되고 있다.³³⁾ 이는 동북아정세 불안에 대비하고 역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국의 안보전략이 영토보존의 소극적 자위로부터 대양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팽창전략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안보전략에 의거, 중국은 현대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군조직을 개편하고 군 장비를 현대화하는 등 군사력 증강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전쟁의 승패가 재래식 무기와 병력의 숫자 보다는 첨단무기와 병력의 질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판단하여 병력 규모를 감축하는 반면 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32) "U.S. Dashes China's GATT Hope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March 3, 1993.

33) 중국이 의미하는 遠洋은 대륙붕과 200Km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한 중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南沙群島·西沙群島 등 중국의 모든 영토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있다.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 작업은 역내에서 구소련과 미국의 군사력 감축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만큼 역내 세력균형 변화를 초래하는 잠재요인이 되고 있다.

(1) 군 조직 개편

기존의 군 조직체제가 비능률적이고 산만하여 군의 전투력 향상을 저해하여 왔다고 인식, 중국은 1980년대 이래 군구편제 개편, 군지도부 인사개편, 군관의 복무조례 제정, 합성군 조직 및 「快速反應部隊」 설립 등을 통해 군의 정예화와 정규화를 도모하고 있다.

국방현대화 방침에 따라 중국은 1983년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별도로 국가 중앙군사위를 신설함으로써 종전의 黨軍에서 국가의 正規軍으로의 전환을 점진적으로 기해왔다. 과거 군대가 정치파벌 대립에 개입하였던 점이 중국군 현대화에 결정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던 바,³⁴⁾ 이러한 조치를 통해 중국은 군의 정치개입 및 군사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파벌대립이라는 폐단을 구조적으로 해소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된다.³⁵⁾ 이와 관련, 1992년 14차 당대회 이후에도 중국은 군부내에 파벌을 조장함으로써 군을 사조직화하였던 楊尙昆과 楊白氷을 추종하는 세력을 제거하고, 젊고 전문지식을 가진 직업군인을 군 요직에 등용

34) 丁樹範, “論四十餘年來共軍的發展,” 「中國大陸研究」, 第35卷 第12期 (1992. 12), pp. 25~33 참조.

35) 毛澤東이 「총구로부터 정권이 탄생한다」(槍桿子裏出政權)라고 주장하였던 바와 같이, 과거 중국에서는 군이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여러차례 있었다.

하여 군의 정치개입 가능성을 제거하고 군부의 단결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³⁶⁾

또한 중국은 군의 정규화를 위해 4년제 사관학교를 설립(1983. 9)하고, 대졸간부 후보생 제도를 도입(1984. 2)하는 등 군간부의 4화(연소화, 지식화, 전문화, 혁명화)를 추진하여 왔다. 나아가 1988년에는 군관의 복무조례를 제정하고 계급제도(1965년 폐지)를 부활시킴으로써 군의 전문화와 정예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핵무기, 우주, 항공 등 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문관제도를 도입하였다.

아울러 중국은 군 조직 정비 차원에서 종전 11개 군구편제를 7개 군구로 개편(1985. 6)하고, 비전투부대를 중심으로 한 4,054개의 단위부대를 해체(1988. 3)하였다. 이러한 조직개편 작업과 더불어 중국은 현대전 수행을 위한 군 정예화 차원에서 1985년부터 1987년까지 약 100만에 달하는 병력을 감축하는 한편,³⁷⁾ 군의 전투력 제고를 위해 체제개혁을 추진해 왔다. 1989년 이래 중국은 각 군구에 「快速反應部隊」를 설치하여 군의 기동력 증강을 도모함으로써 국내 치안 및 돌발적인 지역분쟁에 대한 대

36) 이에 대해서는 “The PLA After the Fourteenth Party Congress,” *China News Analysis*, no. 1478 (February 1, 1993), pp. 1~9 참조. 한편, 14차 당대회에서 楊白氷이 맡고 있던 당 중앙군사위 비서장직을 폐지한 사실도 군부의 사조직화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취해진 조치로 알려지고 있다. 『中國大陸研究』, 第36卷 第1期 (1993. 1), p. 24.

37) 중국은 1985년 6월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병력감축 계획을 결정하여 1987년까지 100만명에 이르는 병력을 감축하여 현재 약 303만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1992년에도 30만명의 병력을 감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明報』 1992. 7. 7.

능력을 제고하였으며, 1992년에는 총참모부 직속의 장갑병, 포병, 방화병 및 공병 등 4개 병과를 통합한 「特種部隊」를 창설하였다.

(2) 군사 무기·장비 현대화

중국은 현재 230만명의 육군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군은 26만명, 공군은 약 47만명에 이르고 있다. 중국은 현재 미국 본토와 구소련 전체를 사정권에 포함할 수 있는 ICBM 8기와 구소련 극동지역과 아시아 전역을 위협할 수 있는 IRBM 60기를 보유하고 있고, 4천기의 전투기와 원자력 잠수함 1척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군장비와 핵전력은 미국과 러시아 등에 비해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대만에 대한 주권 회복과 南沙群島 영유권 확보 등 1990년대 안보전략을 수행하기에는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걸프전에서 첨단무기의 위력이 입증된 점은 중국으로 하여금 군사 장비 현대화를 적극화하도록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³⁸⁾

중국은 군사 장비 현대화를 통해 군사력을 증강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중국이 과거와 같이 자력갱생 원칙에 입각하여 무기·장비를 현대화하는 데에는 기술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외국으로부터 첨단무기(기술)을 도입하여

38) 중국은 최근 신형 구축함 1척, 호위함 25척,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 5척을 새로 갖추는 한편, 육군에 항공국을 신설하고 24개의 집단군에 헬리콥터 부대를 배치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방력 확충계획을 입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東亞日報」, 1993. 7. 14.

국방력을 강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중국의 주요 무기기술 도입선은 러시아 등 구소련연방 국가들이다. 1991년 5월 江澤民 중국공산당 총서기와 秦基偉 국방부장이 소련을 방문, 수호이 27전투기 구입 계약을 체결하는 등 중·소 군사협력문제를 논의하였던 바 있고, 1992년에도 삼소노프 러시아 국방부장(1992. 2)과 옐친 대통령(1992. 12)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중국은 러시아의 항공기술, 수호이 27 전투기, 미그 29기 및 디젤 잠수함 구입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³⁹⁾ 아울러 南沙群島 영유권 확보와 대만 통일을 실현하고자 중국은 우크라이나로부터 최신예 항공모함 구입문제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중국은 병력을 감축하고 이로 인한 비용절감분을 장비 현대화작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軍需産業의 民需産業으로의 전환을 통해 외국으로부터 첨단무기 구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현재 중국 군수산업체 총생산액중 민수품 생산 비중은 70%에 달하며, 그 액수는 약 16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⁴⁰⁾ 중국은 1995년까지 군수산업체의 민수품 생산 비중을 80%까지 제고한다는 목표하에 군수공장 생산라인의 민수용 전환 촉진과 함께 민수화 분야를 핵·우주·항공 등 첨단기술 부문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39) FBIS, *Daily Report, China*, December 21, 1992, p. 9; 「東亞日報」, 1992. 12. 18.

40) 구소련과의 관계 정상화 이후 재래식 무기 수요가 감소되기 시작한 1986년부터 중국은 군수공업의 군·민 결합형 기업으로의 전환을 강조하여 왔다. 군수산업의 민수화 추진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국영기업의 재정적자(1992년 50억달러)를 축소하고 현대화 무기·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재원 확보에 주요 목적이 있다.

(3) 국방비 증액

군사력 증강을 위해서는 경제적 기반이 필요하다. 과거 중국은 경제적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국방현대화를 덜 중시하여 미국이나 소련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국방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⁴¹⁾ 그러나 중국은 지난 14년 동안의 경제발전 결과 축적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최근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고 있다.

1980년대 중국은 「先경제, 後국방」정책을 채택하였는 바, 중국의 총예산중 국방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다. <표 2-2>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1982년부터 1988년까지 중국의 총예산에서 국방비가 점유하는 비중이 3.7%(동기 총예

<표2-2> 중국의 국방비 증액 추세

연 도	87	88	89	90	91	92	93
국방비(억원)	209.7	217.9	251.5	290.3	330.3	370.0	425.0
전년대비 증가율(%)	1.2	3.9	15.4	15.4	13.8	12.0	14.8
재정지출중국방비(%)	8.6	8.1	8.4	8.4	9.3	9.5	8.0
예산증가율(%)						8.6	6.8

출처: 中國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鑑 1992」(北京: 中國統計出版社, 1992);
劉仲黎, “關於1992年國家豫算執行情況和1993年國家豫算草案的報告,”
「人民日報」, 1993. 4. 4.

41) 1993년 중국은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 약 73억 달러를 국방비로 책정하였으나, 이는 국민생산 총액의 약 1%만을 국방예산으로 지출하고 있는 일본(1993년 약 377억달러)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액수이다.

산 증가율은 13.5%)에 불과하였으나, 1989년 이후 중국은 군부의 단결과 사기 진작 및 군사력 증강을 위해 국방예산을 매년 12%(동기 예산 증가율은 약 8%) 이상 증액하여 왔다. 특히 1993년에는 국방예산을 전년대비 14.8%나 증액(약 73억달러)하였다.

더욱이 중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국방예산액은 실제 국방비 지출액과 일치하지 않다는 점이다. 중국의 국방항목의 예산에는 인건비, 보급물자, 식량 및 급료 등만을 포함하고 대외군사지원, 무기구입비 및 군수산업관련 예산 등은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실제 국방비 지출액은 공표된 국방예산액의 두 배 이상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⁴²⁾ 이와 관련, 군수산업의 민수품 생산에서 얻어지는 이익도 외국의 무기구입 등 국방비로 전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⁴³⁾

이와 같이 중국이 최근 대규모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있는 것은 개혁·개방정책에 대한 군부의 지지를 확보하고 중앙정부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군사력 강화를 통해 대외 영향력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평가된다.⁴⁴⁾

42) 黄炳茂, 「新中國軍事論」(서울: 法文社, 1992), pp. 87~92.

43) 이에 대해서는 林長盛, “論中共軍隊參與經濟活動的影響,” 「中國大陸研究」, 第36卷 第3期 (1993. 3), pp. 67~68 참조.

44) 군사력의 역할에 대한 중국의 태도에 대해서는 屈全繩, 劉紅松 編, 「和平演變戰略及其對策」(北京: 知識出版社, 1990), pp. 314~19 참조.

다. 정치

경제개혁·개방정책을 순조롭게 추진하여 「物質文明을 建設」하기 위해서는 사상과 정치적 보증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중국은 「思想解放」 등 「精神文明 建設」을 주장, 과거 통치이념이었던 마르크스·레닌주의-毛澤東사상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치개혁은 어디까지나 사회주의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사회주의체제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바, 중국은 정치개혁을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 국한하여 추진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중국의 정치개혁은 당·정 기구개편과 행정관리체제 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서방식 다당제나 의회제도 등 진정한 민주화와 자유화는 수용하지 않고 있다.

(1) 정치이념의 중요성 감소

毛澤東 사망 이후 鄧小平 등 실용주의 지도자들은 경제건설을 통해 사회주의 체제를 더욱 공고히할 필요를 갖게 되었고, 이를 위해 개혁·개방에 장애가 되어온 기존 통치이념에 대한 재평가 작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鄧小平은 마르크스·레닌주의-毛澤東사상이 4개 현대화정책과 개혁·개방정책에 대한 이념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이들 기존 통치이념이 모든 영역에서 절대적인 구속력을 갖는 가치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鄧小平을 위시한 중국의 실용주의 지도자들은 맹목적으로 毛澤東을 신격화했던 과거의 노선에서 탈피하여 「실천이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과 「실사구시」원칙에 따라 사상을 해방 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실용주의 지도자들의 이러한 입장은 黨 11차 6중전회에서 채택된 「歷史決議」와 1984년 「理論與實際論」 등을 통해 표명되었다. 이를 통해 중국이 毛澤東사상 등 기존 통치이념도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므로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기존 통치이념에 대한 재평가는 1987년 13차 당대회를 통해서 더욱 심화되었다. 趙紫陽은 공산주의 사회에 이르는 과도기인 사회주의 사회에도 여러 개의 단계가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중국이 처해있는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는 물질적 생산력이 계급성과 정치성 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92년 鄧小平의 「南巡講話」 이후 중국은 사회주의 이론에 대해 더욱 신축성 있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鄧小平은 중국 남부지역을 순시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에도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있으며, 사회주의에도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본주의 요소 도입을 역설하였다. 鄧小平의 이러한 「南巡講話」의 주장은 정통 마르크스 경제이론을 부정하는 것으로써 경직된 사상의 속박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鄧小平의 주장은 14차 당대회에서 당의 공식 노선으로 확정되었다. 중국은 1984년 12차 3중전회에서 채택한 「社會主義 商品經濟」라는 개념을 더욱 발전시켜 「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를 확립할 것을 역설하고, 자본주의 경제의 장점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또한 「黨 規約」의 개정을 통하여서도 사회주의제도가 자본주의제도 보다 우월하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이상과 목표를 포기하고,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이론」과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 구상 등을 명기함으로써 개혁·개방정책을 합리화하고 있다.⁴⁵⁾ 이와 관련, 중국은 여전히 「4個 基本原則」을 정치개혁의 한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마르크스 레닌주의-毛澤東사상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으나, 최근에는 「4개 기본 원칙」의 내용도 생산력의 발전, 범죄단속 및 부패척결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⁴⁶⁾

요컨대, 중국에서 사회주의 노선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으나, 과거 통치이념으로 작용하였던 마르크스·레닌주의-毛澤東思想은 경제건설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그 중요성이 점차 감소되고 있다.

45) 吳安家, “中共「十四大」修改黨章的政治意涵,” 「中國大陸研究」, 第36卷 第1期 (1993. 1), pp. 5~13; 14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중국공산당 당 규약 전문은 FBIS, *Daily Report, China*, October 22, 1992, pp. 1~15 참조.

46) 房良鈞, “新時期4個基本原則的內容,” 「光明日報」, 1993. 2. 22.

(2) 당·정개혁

경제건설을 위한 환경조성 차원에서 취해지고 있는 당·정개혁 조치는 지도기구의 축소개편, 행정권한의 하방 및 집단지도 체제 구축 등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개혁조치를 통해 행정효율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후계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경제개혁·개방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보장하고자 하고 있다.

(가) 당·정기구의 축소개편

1980년 8월 黨中央 政治局擴大會議에서 鄧小平이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중국은 당 서기처를 부활시키고 당중앙을 중앙위원회, 고문위원회 및 기율검사위원회로 개편하는 등 당기구의 개편작업을 추진해 왔다. 또한 黨主席制를 폐지하고 總書記 및 國家主席制를 부활시킴으로써 毛澤東시대 권력의 집중에 따른 폐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여 정치적 안정을 기하고자 하였다.

또한 중국은 정부기구의 효율을 제고하고 관료주의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國務院 機構의 개편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중국정부의 기구개혁은 1982년과 1988년 두차례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실시되었다. 특히 1987년 10월 13차 당대회에서 정치체제 개혁의 일환으로 정부기구의 간소화 방침을 결정한 이후, 중국은 국무원 부처를 당초 45

개에서 41개로 축소(1988. 3)하고 중앙부처의 공무원 인원도 5만명(1988. 9 기준)에서 4만 5천여명으로 감축(1989. 12)하였다.

그러나 지도기구 개편작업은 경제체제 개혁에 비해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다.⁴⁷⁾ 1990년 현재 중국의 각급 국가기관 종사자들이 약 3천 4백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1980년 대비 약 70%가 증가된 숫자이다. 이와 같은 당·정기구의 급격한 팽창은 국가 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1980년의 경우 중국의 행정관리 비용 총액은 66.8억元(중국 人民幣)으로 국가 재정지출 총액의 5.5%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에 이르러서는 행정관리 비용 총액이 333.5억元으로 국가 재정지출 총액의 9.7%로 증가하였다. 또한 이 기간동안 중국의 연평균 재정지출은 11% 증가한데 비해 연평균 행정관리비 지출은 17% 증가하였다.⁴⁸⁾ 이와 같이 방만한 당·정기구 유지로 인하여 야기된 업무의 비능률과 국가 재정부담 증가 등 부작용은 경직된 官僚主義體制와 黨·政 幹部制度의 문제점과 더불어 국가기관의 업무효율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어 경제개혁·개방을 지연시키는 작용을 하였으며, 당과 국가에 대한 중국인민의 信賴性和 正當性を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47) 중국의 당·정기구 개편작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기구(經濟體制改革委員會, 社會治安整理委員會, 國務院 生產辦公室 등)들을 설립해 왔기 때문이다. 둘째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믿지 못하고 지방에 직속기구를 별도 설립해 왔기 때문이다. 셋째는 퇴임관료들을 위해 관료 기구를 확대하는 경우가 있어 왔기 때문이다.

48) 「廣角鏡」, 1992年 8月號, p. 9.

따라서 중국은 14차 당대회와 8기 전인대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과 개혁·개방을 가속화하는데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기능을 개혁하고자 행정관리체제 및 기구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을 결의하였다. 중국은 거시적 조정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기능을 개혁하고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정책결정 과정의 합리화를 기하고 있으며, 각급 행정기관의 업무규칙과 업무절차를 과학화하고 업무시한 등을 설정함으로써 행정효율을 제고하고 국가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년 4월 19일 중국 국무원은 기존 19개의 직속기구를 13개로, 9개의 사무기구를 5개로 축소하는 등 기구개편 방안을 결정하였던 바 있다.⁴⁹⁾

(나) 행정권한 下放

과거 중국의 정치체제하에서는 당과 정부기관이 경직화되었고, 관료의 태만과 무사안일주의가 만연되었다. 이와 같은 행정부문의 비효율성은 경제개혁·개방정책 추진과정에서 커다란 장애가 되었는데, 鄧小平 등 中國의 개혁과 지도층은 지방과 기업에 대한 중앙의 간섭을 축소하는 한편 인사제도 개혁을 통해 행정부문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였다.

지방과 기업에 권한을 확대해 주는 문제는 주로 가격제도, 재정권한 및 임금결정 등 경제관련 분야에 한정되었다. 종래 중앙

49) 「文匯報」, 1993. 7. 11.

정부가 모든 상품가격을 결정하고 財政權을 장악하고 있었으나, 경제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지방정부가 부식품 등 가격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업이 독자적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권한도 갖게 되었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해 왔던 재정권을 지방정부에 일부 이양해 줌으로써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또한 경제특구를 비롯한 개방도시에서는 지방정부와 기업이 자율적으로 대외 무역에 종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분적으로 부여받았다. 이로써 중앙정부가 더 이상 대외무역과 관련된 업무를 독점할 수 없게 되었으며,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외국의 기업 또는 정부와 수출입 및 외자도입 등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행정권한의 하방조치는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되어 중앙지도부에 의해서 속도가 완화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廣東省 등 경제특구 지역의 관리들은 그들이 중국경제에 미친 역할을 중시하고 중앙정부에 대해 보다 많은 독자권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이러한 독자권한 확대 요구는 지역이기주의와⁵⁰⁾ 연계된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분열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안정과 단결을 중시하는 중국의 지도자들은 행정권한의 하방조치가 중앙의 권위와 거시적 통제기능을 약화시키지 않는 범주내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

50) 특정 지방의 경제발전 속도가 중앙정부가 설정한 목표를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중북투자문제 등이 야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1993년 4월초에 개최된 당중앙공작회의시 江澤民 총서기가 「지방토호주의」를 비판한 바 있다.

장을 보이고 있다.

(다) 집단지도체제 구축

중국은 법과 제도에 의해서 보다 개인간의 정실에 의해서 지배되는 「人治社會」이다. 따라서 권력승계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책상 일관성이 결여될 수 밖에 없었고, 그 결과 과거 中國에서는 끊임없는 정치적 혼란이 초래되었다. 毛澤東 사후 4人幫의 정권탈취 기도 때문에 정치적·사회적 혼란이 조성되었고, 4人幫 숙청이후에도 華國鋒과 葉劍英 그리고 鄧小平간의 첨예한 대립관계로 정치적 불안이 야기된 바 있다.

鄧小平은 경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자신의 사후에도 정치적 안정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집단지도체제라는 과도기적 조치를 통하여 후계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자 노력해 왔다. 집단지도체제 구축이라는 과도적 조치를 통하여 권력승계의 제도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던 鄧小平의 노력은 중국정치가 여전히 鄧小平 등 현직에서 퇴진한 원로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점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⁵¹⁾

공산당 제14차 1중전회와 8기 전인대에서 江澤民에게 당(총서기)·정(국가주석)·군(중앙군사위 주석) 3권을 장악하게 함으로써, 중국은 江澤民을 중심으로 한 후계체제를 구축하고자 하

51) 이와 관련, 14차 당대회시 중국은 당중앙고문위원회를 폐지함으로써 이원적인 지도체제로 인하여 초래된 혼란을 배제하고 현 지도층의 권위를 강화시키고자 하였으나, 중요 정책 결정시 원로들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였다.⁵²⁾ 아울러 李鵬(국무원 총리), 喬石(전인대 상무위원장), 李瑞環(정협 주석) 등 당 정치국 상무위원에게 정부의 주요 직책을 겸직하도록 함으로써 집단지도체제를 안정적으로 확립하고자 하였다.⁵³⁾ 이는 개혁·개방 가속화에 따른 사상혼란 방지 등 정치안정을 기하고 개혁·개방의 지속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되나, 당·정분리원칙에 역행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江澤民이 鄧小平과 같은 정치적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8기 전인대의 인사개편이 보수파와의 타협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평화로운 권력이양과 鄧小平이 원래 의도하였던 바와 같은 방향으로의 후계체제가 공고하게 구축될지의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다.

(3) 사회주의 민주화

개혁·개방정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치·사회적 안정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중국은 전인대와 정치협상회의 제도개선을 통한 국민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와 사회주의 법제건

52) 이와 관련, 鄧小平은 天安門사건 이후 군부내에서 세력을 강화해온 楊尙昆과 楊白水의 세력을 약화시킴으로써 江澤民의 지지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14차 당대회에서 양상곤은 중앙위원에 선임되지 않았고 중앙군사위 상무 부주석으로부터 서도 물러나게 되었다. 楊白水 역시 정치국원으로 승진되었지만 중앙군사위에서 물러나게 되어 군부내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게 되었다. 아울러 「楊家將」으로 분류되는 군부지도자들이 경질되고 군부의 주요 지도자들이 개혁·개방정책을 지지하는 인사들로 대체되고 있다. "The PLA After The Fourteenth Party Congress," *China News Analysis*, no. 1478 (February 1, 1993), pp. 1~9; FBIS, *Daily Report, China*, January 28, 1993, pp. 10~13.

53) 吳安家, 앞의 글, p. 12.

설 등의 제한적인 조치를 통해 정치·사회적 위기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개혁·개방정책 추진 이래 중국은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축소하고 예술, 문학 및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통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하였으며, 최근에는 당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예술활동에 대한 자유를 보장한다는 방침을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은 최근까지 당이 관장해온 언론·검열 통제 업무를 국무원 산하에 신설될 신문국과 출판국으로 이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언론의 기능을 「人民日報」 등 당기관지를 제외하고는 이념과 정치선전 위주에서 국민에 대한 정보 서비스 제공 확대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⁵⁴⁾ 이는 개혁·개방에 따른 국민의 의식구조 및 사회구조 변화에 부응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지지기반을 확보하여 체제안정을 도모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중국은 형식적이기는 하나 국민에게 全人大 대표 선출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全人大의 기능도 단순히 당의 방침을 추진하는 「고무도장」의 역할에서 점차 탈피하도록 조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에서는 현재 당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 전인대 대표가 반대하거나 기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또한 공산당 이외의 소수당과의 합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8기 전인대에서는 榮毅仁和 費孝通 등 비공산당원을 정부의

54) 「人民日報」, 1993. 2. 23; 「文匯報」, 1993. 2. 25.

주요 직책에 임명하여 내부 단결을 도모하고 있다.⁵⁵⁾

중국이 현재 최우선적인 목표로 설정·추진하고 있는 경제발전 달성을 위해서는 사회질서의 안정이 필요하다. 개혁·개방의 가속화는 필연적으로 경제·사회적 혼란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국은 「社會主義 法制建設」이라는 구호하에 사법기관을 강화하는 동시에 각종 법규를 정비하고, 법집행을 엄격히 함으로써 개혁·개방과 현대화건설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중국은 政法機關의 인원을 증원하고 자질향상을 꾀하고 있다.⁵⁶⁾

중국은 여전히 언론통제와 戶口制度 등을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을 통제함으로써 사회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각종 법제 정비 및 국민의 정치참여 기회의 점진적 확대를 통하여 「社會主義 民主化」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의미하는 「社會主義 民主化」는 경제건설을 위한 환경조성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에 불과한 만큼 서구식 민주화나 자유화 수용에는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14차 당대회 시 채택된 江澤民의 「政治報告」와 당규약에서도 중국은 서방식 다당제나 의회제도를 반대하며 단지 당내 민주만을 수용한다는

55) 8기 전인대 1차회의시 각종 법안과 인사개편에 대한 전인대 대표의 반대·기권 비율이 10% 이상을 차지하였다. 또한 14차 당대회 이후 각 지방 별로 실시된 省長선거에서도 浙江, 貴州, 湖北省 등 지방의 인민대표대회 대의원들은 당 중앙에서 천거한 후보를 탈락시키고 자체 지명한 후보를 省長으로 임명한 바 있다.

56) "Law and Public Order," *China News Analysis*, no. 1476 (January 1, 1993), p. 4; 「文匯報」, 1992. 12. 27.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아울러 중국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법제건설」도 통치수단에 불과할 따름이며 인권이나 자유 신장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 요컨대, 중국의 정치개혁은 행정개혁 부문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을 따름이며 「4個 基本原則」의 제약하에 극히 미미한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3. 개혁·개방 전망

1992년 鄧小平의 「南巡講話」 이후 중국에서는 개혁·개방 가속화를 주장하는 개혁파가 정국을 주도하고 있으며, 李先念과 王震 등의 사망 및 李鵬의 건강악화로 보수원로들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향후 5년동안 중국이 채택할 정책노선을 결정한 14차 당대회와 8기 전인대 1차회의에서 중국은 공산당 규약과 헌법 개정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장점을 적극 도입할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지난 14년 동안의 개혁정책으로 물질적 풍요를 구가하고 있는 국민들과 군부도 개혁·개방정책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개혁정책의 조타수인 鄧小平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 경제

중국은 2000년대 중반까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진경제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대내적으로는 산업구조 조정과 경제효율 제고를 위한 조치를 단행해 나갈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무

역체제를 개선하고 개방지역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1) 대내 경제개혁

중국지도자들은 경제파탄이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의 붕괴를 유발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인식하여 내부경제 발전을 통해 중국인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체제를 공고히 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경제는 국영기업의 비효율성, 정부 재정적자의 누적, 과잉투자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 재발 가능성, 1989년 조정정책 이후 농업생산 둔화 및 산업구조의 비합리성 등의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중국경제 개혁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효율 제고를 위한 조치는 주로 기업의 경영자율권 확대, 가격체제와 유통체제 개혁 및 증신고용제 철폐 등에 역점이 두어질 것으로 보인다.⁵⁷⁾ 1978년 이래 경영권을 기업에게 일부 이양해 줌으로써 중국경제는 어느 정도 생산성 증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가 여전히 소유권과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바, 이는 중국 경제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國務院은 1992년 2월초 1000여개의 국영기업에 근로자의 고용, 해고 및 임금결정 등에 관한 경영권을 부여해 주었

57) Wu Naitao, "Eight Major Tasks For Reforms in 1993," *Beijing Review*, March 8~14, 1993, pp. 15~17; 李鵬, "政府工作報告," 「文匯報」, 1993. 4. 1.

으며,⁵⁸⁾ 이러한 조치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주식제 확대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영기업을 민영화함으로써 경제효율을 제고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는 또한 재정적자 축소와 기업경영 활성화를 위해 부실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지급 제도를 점차 폐지하고 기업소득세를 인하할 것이다.⁵⁹⁾

농업부문에 있어서도 중국은 식량증산 및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농가생산책임제를 확대 실시하는 한편 「鄉鎮企業」을 중점 육성하고 농산품의 유통체제와 가격체제 개혁을 적극 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연안지역의 개방도시를 중심으로 추진해온 개혁·개방정책 결과 도·농간 소득격차가 발생하였고, 농촌 인구가 대거 도시로 유입되어 도시 실업율이 증가하고 개방지역의 범죄율 증가 등 각종 사회문제가 유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중국의 사회불안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특히 북서부 지역의 「鄉鎮企業」 육성 및 농가 재정부담 경감책 등을 통해 농업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다.⁶⁰⁾

58) 중국은 국가재정 적자를 야기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는 국영 대중형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三鐵」 타파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深化企業內部三項制度改革,” 「人民日報」, 1992. 4. 12.

59) 중국은 1992년부터 막대한 재정적자를 축소하고자 기업에 대한 보조금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1995년까지 기업소득세를 현재의 55%에서 33% 정도로 인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張伍, “中國改革: 出現有利時期步伐將要加快,” 「經濟導報」, 總2251~2期(1992. 1. 1), p. 108.

60) 특히 중국은 1993년 3월 지방정부가 농민에 부과하고 있는 각종 세금이 납세후 순수입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세율을 인하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정부담 경감책을 발표하였으며, 곡물수매시 현금지급 대신 지불약정서(白條) 남발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人民日報」, 1993. 4. 15.

한편 기업경영의 외적 환경 개선을 위해 중국은 점진적으로 가격자유화 조치를 단행하고, 상품의 유통체제 개혁 및 금융체제 개혁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특히 중국이 현재 채택하고 있는 이중가격제도(계획가격과 시장가격 병존)는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개혁추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중국은 계획가격의 적용대상을 축소하고 시장가격의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중국은 기업에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주식과 채권 발행을 확대하고 증권거래소의 실험을 촉진해 나갈 것이다.

중국은 또한 경제환경이 변화됨으로써 수요공급관계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 산업구조 조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중국의 산업구조 조정은 3차산업의 비중 증대, 각 산업 내부구조 조정 및 상품구조 조정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증권·보험 등 3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낙후된 기초산업 등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 등 3차산업 육성은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효율 제고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2) 대외 경제개방

중국은 자력갱생에 의해서는 금세기까지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小康段階」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개방지역을 확대하고 선진 경제국과의 교역 증대를 모색하고 있다. 14차 당대회와 8기 전인대 1차회의에서 확정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 방침하에, 중국은 앞으로 대외개방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대외무역체제를 적극적으로 개혁할 전망이다.

중국은 최근까지 개방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開放區를 지정하여 왔다. 그러나 지난 10여년 동안의 개방정책으로 중국 국민들이 어느 정도 외국문물에 대한 면역성을 갖게 되어, 중국은 「全方位 對外開放」 방침에 입각 개방지역을 점차 內陸과 邊境地域으로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武漢, 九江과 蕪湖港 등 揚子江 유역의 내륙지역을 沿江開放區로 지정하였으며, 현재 훈춘시와 新疆自治區까지 沿邊開放地로 지정하였다. 아울러 기존 개방지역에도 대외개방의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중국은 上海의 浦東地區와 海南島의 洋浦港을 1990년대 중점개발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바, 이들 개방지역을 保稅區(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하여 대외무역상 더욱 광범위한 특혜를 부여해 줌으로써 외자 유치를 촉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개혁·개방 확대 방침에 따라 대외무역체제 개혁을 통해 대외무역을 확대하고 외자를 적극 유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1979년 이래 대외무역권을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와 기업에 下放하는 등 대외무역 체제개혁 조치를 취해 왔으나, 중앙정부가 여전히 대외무역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아 중국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왔다. 따라서 중국은 앞으로 정부와 국영기업 이외에도 개인기업에게 직접 대외무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⁶¹⁾ 또한 중국은 환율제도를 개혁하여 환율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한편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할 것이다. 중국은 점차 단일변동환율제를 실시하여 외환 관리를 시장기능에 맡기고 관세율 인하조치를 취하여 대외무역을 확대하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등 국제 경제기구 가입을 적극 모색할 것이다. 이와 관련, 중국은 국내 유치산업 보호 명목하에 부과해온 수입조절세를 폐지하였으며, 수입허가증제도 적용 대상을 점차 축소하고 있다.⁶²⁾ 아울러 중국은 외국인에게도 서비스부문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등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⁶³⁾

이와 같이 대내외 경제개혁·개방정책이 가속화됨에 따라, 중국경제는 급속한 성장을 시현하고 있다. 1992년 중국경제 성장율이 12.8%에 달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율을 기록하였고, 1993년 상반기에도 경제 성장율이 13.9%에 달하였다. 중국은 수출지향적 경제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바, 1992년 중국의 수출입 총액이 전년 대비 22% 증가한 1656억달러에 달하여, 중국의 대외무역 규모가 세계 11위를 기록하였다.⁶⁴⁾

61) 국가계획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수출상품의 비율은 현재 37%에 불과하다.

62) 중국은 향후 5~6년 이내에 유치공업제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대한 수입허가증 제도를 철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文匯報」, 1993. 5. 6.

63) 중국은 1992년 2월부터 上海 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의 주식거래를 허용하기 시작하였으며, 1993년부터서는 금융·보험, 교통·운수 및 유통산업 등 3차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였다. 외국인에 대한 주식거래 허용조치는 외자 도입을 촉진시키는 가장 혁신적인 조치이며, 이는 중국이 국영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64) 鄒家華, “關於1992年國民經濟和社會發展情況與1993年計劃草案的報告,” 「人民日報」, 1993. 4. 4; 「文匯報」, 1993. 4. 20.

경제개혁·개방정책이 가속화될 경우 통화팽창과 지역·계층간 소득격차 확대 등 문제점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나 中國經濟는 지속적으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10년동안 중국은 최소한 7%의 경제 성장율을 유지하여, 21세기초 중국 국내총생산액(GDP)이 현재 약 4천 5백억 달러의 두배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중국경제가 이와 같은 추세로 성장할 경우 21세기초 홍콩과 대만 등을 포함한 중국은 세계 최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⁶⁵⁾ 그러나 鄧小平 사후 예상되는 정치불안 및 중국경제의 구조적 불합리성 등으로 볼 때, 1990년대말까지 중국이 선진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냉전체제 와해 이후 군사력 보다 경제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바, 중국의 경제력 증강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제고시키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군사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중·장기 목표가 동아시아에서 지역 강대국으로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데 있는 바, 계획대로 경제력을 신장시킬 경우 중국은 군사력 증강을 위한 행보를 더욱

65) *Business Week*, May 17, 1993, p. 22; 馬庫斯 布勞克利, “中國:27年後的經濟最強國,” 「文匯報」, 1993. 2. 26.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통화 구매력을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1992년 중국의 국내총생산액이 1조 6천 6백억달러를 기록 이미 세계 3대 경제대국으로 발전하였으며, 2002년 대만과 홍콩을 포함할 경우 국내총생산액이 9조 8천억달러로 세계 최대 경제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朝鮮日報」, 1993. 5. 22.

적극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혁·개방정책 가속화와 鄧小平 사후 현지도부에 대한 군부의 지지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바, 이를 위해서도 중국은 국방예산을 증액하고 군사 현대화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원양 방어전략에 부응하기 위해 해·공군력 현대화에 중점이 두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중국은 2000년까지를 제1단계, 2050년까지를 제2단계 해군력 정비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1단계에서는 육상 발전의 중거리 항공기 부대와 공격형 잠수함을 주요 공격력으로 하고 헬리콥터 탑재 중형 수상함정을 지휘·지원전력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제2단계에서는 경제력과 기술력 발전 정도에 따라 항공모함을 주축으로 대공, 대함정, 대잠수함 작전능력을 갖는 수상함정과 잠수함을 갖춘 기동부대를 보유한다는 것이다.⁶⁶⁾

이러한 계획에 입각, 중국은 1991년말 개최된 「全海軍工作會議」에서 21세기 초까지 중형 항공모함 2척을 자체 건조하기로 확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⁶⁷⁾ 또한 중국은 1993년부터 1995년까지 러시아로부터 72대의 SU-27 전투기와 18기의 탄도미사일 시스템 및 3척의 그루지아급 잠수함을 구입할 계획이며, 미그 31기 생산라인을 도입할 것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⁶⁸⁾

66) 중국은 1989년 12월 「해군력 정비방침」을 확정하여 2050년까지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과 항공모함을 구비할 것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67) 「東亞日報」, 1993. 5. 14.

68) 江遙, “中國爲何增加軍費?” 「爭鳴」, 1993年 1月號(1993. 1), p. 19.

최근 중국이 南沙群島와 釣魚臺列島 등을 자국영으로 규정한 영해법을 제정하고, 파키스탄 등에 M-11 미사일 부품을 판매하고, 캄보디아에 유엔 평화유지군(447명)을 파견(1992. 4)하고, 미얀마의 하인리섬에 해군기지 건설을 지원하고 있는 바, 이들 조치는 모두 인도지나 등 태평양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기도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이 계획하는 바 대로 군사력을 증강하게 될 경우, 중국은 아시아의 세력균형 변화를 주도하는 세력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필리핀 주둔 미군 철수, 구소련 붕괴에 따른 미·러 대결구도의 와해 및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만큼 역내질서 안정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지도부가 중국은 항공모함 구입계획이 없고 중국의 군사력이 방위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따름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⁶⁹⁾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향후 주변국의 안보에 큰 위협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혁·개방정책이 성공하더라도 1990년대 중국이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군사대국으로 부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첫째, 군사력 증강에 요구되는 경제력의 제약, 둘째, 경제건설을 위해 주변국과 선린관계 유지 필요, 셋째, 연안지방 등 경제발전에 의해 혜택을 입은 지역과 국민들이 군사보다 경제를 우선시하고 있는

69) 錢其琛, “錢其琛答記者問,” 『文匯報』, 1993. 3. 24.

점 등이다.

다. 정치

중국의 현 지도부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공고히 할 수 있는 첩경은 정치민주화 보다도 경제발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현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유도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과거 대만과 한국의 경우처럼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치 민주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정치개혁은 鄧小平 등 혁명 제1세대가 존재하는 한 「4項 基本原則」의 범위내에 국한되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국 지도부는 정치체제의 경직성이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장애가 되어 왔던 점을 감안, 1990년대 경제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치적으로도 제한적이거나 개혁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추진할 정치개혁은 간부의 자질강화를 통한 관료주의 폐단 제거, 지방정부와 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간섭 축소, 다당합작제 실시 등에 중점이 두어질 것이다. 중국은 이와 같은 정치적 조치를 통하여 생산력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주의 체제 공고화를 도모해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이 중국의 정치개혁은 사회주의 생산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라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바, 과거 경제개혁 추진을 저해해 왔던 제반 요인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치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은 기업에 대한 행정간섭을 축소함으로써 기업의 생산력 증대를 도모해 나갈 것이다. 그 구체적 조치의 하나로써 중국은 8기 전인대 1차회의를 계기로 경제개혁 추진에 장애가 되어온 당·정기구를 폐지 또는 축소개편하고 있다.⁷⁰⁾

아울러 중국은 간부제도 개혁을 통해 관리의 자질향상을 기함으로써 관료주의적 병폐를 제거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종래 중국의 당·정 간부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私利를 도모하는 등 관료주의적 병폐가 심각하였는 바, 이는 경제개혁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현 지도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증폭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중국 지도부는 「鐵交椅」(평생 직위 보장제) 제도를 타파함으로써 간부의 자질을 제고하고 부패를 줄여 廉政建設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또한 정국의 안정과 현 지도층의 권위 강화를 정치개혁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설정해 왔다. 과거 자신의 승계자로 지목했던 胡耀邦과 趙紫陽이 보수파의 공격으로 숙청되기는 했지만, 鄧小平은 자신의 死前에 권력을 승계해 주는 것이 중국의 불확실한 장래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인식해 왔다. 이와 관련, 鄧小平은 江澤民을 중심으로 한 후계체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14

70) 중국은 李鵬의 「政府工作報告」를 통해 향후 3년내 국무원 산하기구를 현재 86개에서 59개로 대폭 축소·개편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은 자원부, 기계전자공업부, 항공공업부, 경공업부, 방직공업부, 상업부, 물자부 등을 폐지할 방침으로 있다. 「文匯報」, 1993. 3. 16.

차 당대회시 당중앙고문위원회를 해체하고, 8기 전인대 1차회의시 江澤民에게 국가주석을 겸직하도록 하여 당·정·군 삼권을 장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江澤民이 鄧小平과 같은 정치적 카리스마가 없고, 군부를 실질적으로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鄧小平 사후 江澤民體制가 안정적으로 유지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李先念과 王震이 사망하고 彭眞의 건강상태가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됨으로써 보수원로들의 정치간여가 축소될 전망이다. 군부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楊尙昆과 楊白水 등이 江澤民體制에 도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⁷¹⁾ 특히 서방의 대중 압력이 강화되고 중국 경제발전 속도가 현저하게 둔화될 경우 江澤民의 입지가 위협받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정치개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제개혁·개방이 심화됨에 따라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신념이 약화되고 국민들 사이에서 정치적 자유와 민주화 요구가 증폭될 것이다. 경제개혁 과정에서 소외당한 지식인과 내륙지역의 농민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불만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으며, 西藏 등 회교도 자치구에서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요구가 증폭될 것이다. 또한 지역주의화 현상도 중국의 분열을 조장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개혁·개방에 따르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공산당의 정당성

71) Tai Ming Cheung, "Who's on Top? : China's Military Faces a Leadership Vacuum," *Far Eastern Economic Review*, April 22, 1993, p. 18.

과 권위 약화와 맞물려 나타날 것인 바, 중국 정치체제의 변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⁷²⁾ 아울러 중국이 계속 광범위한 정치개혁을 목살할 경우 미국 등 서방 선진국들은 중국정부에 대해 정치·경제적 압력을 가할 것이며, 이는 중국의 국제적 고립을 가져와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한적인 정치개혁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건설을 강화할 경우 중국은 장기적으로 구소련과 동유럽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들의 물질적 생활수준 제고는 필연적으로 정치적 자유와 민주에 대한 열망을 고조시킬 것이며,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신념을 약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중국 국민들의 의식구조 변화와 체제개혁은 중국사회주의 체제의 성격을 대폭 변화시킬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에서는 사회주의 이념이 쇠퇴하고 민족주의가 대체 이념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구소련과 같이 급속한 체제붕괴의 위기에 봉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鄧小平 등 혁명 제1세대의 생존이 중국사회주의 체제 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다. 둘째, 1989년 천안문사건의 교훈으로 중국정부는 체제에 대한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대응력을 강화하게 되었다. 셋째, 경제발전에 의해 이익을 보게된 대다수의 중국 국민들이 기존질서의 파괴는 毛澤東時代의 경제적 빈곤과

72) Lena H. Sun, "Beijing's Galloping Economy Overturms Tradition,"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ly 28, 1993.

文革과 같은 사회적 혼란을 재발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국민들은 경제적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급격한 정치적 변화를 반대하고 점진적인 체제변화를 선호하고 있다. 넷째, 중국공산당이 군부와 공안기관을 효율적으로 장악하고 있다는 점 역시 중국 社會主義體制를 안정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섯째, 전통적으로 중국 국민들이 「天下大亂」을 원하지 않고 안정을 선호하여 왔으며, 중국내 소수민족이 8%에 불과하며 소수민족문제가 통제 가능한 상태에 있다. 여섯째, 강력한 중앙정부하에서 군사현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군부가 지방분권화를 적극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⁷³⁾

73) Ellis Joffe, "Expect China's Far-flung Military to Remain Loyal to The Center,"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ly 21, 1993.

第三章 중국의 개혁·개방이 동북아질서에 미칠 영향

1. 개혁·개방 가속화와 대외정책 전개 방향

중국의 현지도부는 중국이 추구할 바람직한 외교정책 노선은 경제건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변국과 선린관계를 강화하고, 미국과 긴장관계를 완화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아시아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력공백을 메움으로써 지역 강대국으로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대외정책은 사회주의체제 안정유지를 위한 경제건설과 역내에서 영향력 확대라는 두가지 목표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개혁·개방정책을 핵심 정책노선으로 결정한 이후 중국은 외교분야에 있어서도 이데올로기 보다 실리를 중시하는 실용주의 외교정책을 추진해 왔다. 1982년 이래 중국은 특정 강대국과 전략적 협력이나 강대국간의 이해대립에의 개입을 가능한한 회피하는 「獨立自主 外交」를 추구해 왔으며, 국가간 이념과 체제를 초월한 「和平共存」을 강조하여 왔다. 1990년대에 들어서도 중국은 유리한 전략적 환경과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全方位 外交」를 전개하여 국제무대에서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개혁·개방정책이 가속화됨에 따라 중국은 대외정책에서 이념보다 경제적 실리를 더욱 강조하게 될 것이며,⁷⁴⁾ 중국의 대외활동 공

74) Chen Qimao, "New Approaches in China's Foreign Policy: The Post-Cold War Era," *Asian Survey*, vol. 33, no. 3(March 1993), pp. 241~45.

간도 확대될 것이다. 이와 관련, 중국은 「아·태경제협력 각료회의」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트) 등 국제협력기구에 적극 참여하여 경제건설을 촉진하고 역내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중국은 경제건설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평화로운 주변환경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주변국과의 선린관계 유지·강화를 핵심 외교정책 노선으로 간주할 것이다. 이와 관련, 중국은 1989년 고르바초프 및 1992년 옐친의 방중과 1991년 江澤民의 방소를 계기로 중·러관계를 정상화하였으며, 1991년 11월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 두모이의 방중을 계기로 베트남과의 관계 정상화를 실현하였으며, 현단계에서 南沙群島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을 유보하고 차후에 관련 당사국간 대화에 의해 해결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⁷⁵⁾ 아울러 중국은 1992년 8월 북한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과 국교를 정상화하여 한반도에 두개의 한국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하였다. 중국의 이러한 결정은 한반도의 두개 한국에 대해 등거리정책을 전개하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가속화됨에 따라 점차 한국과 일본 등 역내국가들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 의존관계가 심화되고 있다. 중국은 일본과 연간 250억달러를 초과하는 무역관계를 유지

75) “南沙局勢和中國的立場,” 「文匯報」, 1992. 7. 18 社論; 「文匯報」, 1993. 4. 27; Leszek Buszynski, “ASEAN security dilemmas,” *Survival*, vol. 34, no. 4(Winter 1992~93), pp. 91~94.

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무역규모도 연간 약 10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대외무역 규모가 국민총생산의 약 30% 이상을 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경제가 세계경제에 편입될수록 중국은 지역안정 유지를 위해 북한 등 역내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한 무기이전을 자제할 것이며,⁷⁶⁾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도 보다 분명하게 반대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중국은 기존 국제경제질서를 적극 수용할 것이며, 냉전체제 붕괴이후 나타나고 있는 신국제정치질서의 안정을 위해 유엔 등 다자기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방의 對中 「和平演變」 전략으로 인한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중국은 주변국과 선린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일본과 협력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도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한 전략적 고려에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⁷⁷⁾

그러나 개혁·개방 가속화에 따라 사회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념이 약화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예상된다. 개혁·개방에 따른 부작용이 심화될 경우 보수세력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다. 특히 개혁·개방 가속화에 따른 지방 분권화 현상은 대외협상을

76) 1980년대 이래 중국의 대외무기 수출은 정치적 고려보다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 Eric Hyer, "China's Arms Merchants: Profits in Command," *China Quarterly*, no. 132 (December 1992), pp. 1101~18.

77) 주변국에 대해 중국이 선린외교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전략적 의도에 대해서는 張雅君, "九〇年代中共的亞太戰略," 「中國大陸研究」, 第35卷 第11期(1992. 11), pp. 20~23 참조.

중시하는 지방정부의 권한 약화를 초래하는 반면, 대외 강경노선을 주장하는 중앙정부의 권한 강화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국은 신장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권문제와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국익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대만 및 홍콩문제, 「南沙群島」 등에 대한 영유권 문제 등)에 대해 강경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⁷⁸⁾ 이와 관련, 중국 全人大는 1992년 2월 南沙群島 영유권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한 바 있다.

요컨대, 중국에서 보수파의 입지가 강화될 경우 뿐만 아니라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경제력을 강화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될 경우에도, 향후 중국의 대외정책은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1989년이래 중국이 군사비를 대폭 증액하고 있는 이유가 지역 강대국으로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그러나 1990년대까지 중국이 대내 경제건설을 최우선시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⁷⁹⁾ 중국은 당분간 대외 팽창지향적 태도를 보이기 보다는 대내문제 해결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78) 李鵬, “政府工作報告,” 「文匯報」, 1993. 4. 1; 鄭言思, “1992: 靈活務實的中國外交,” 「瞭望」, 1992年 第51期 (1992. 12. 21), p. 16; Yasheng Huang, “China’s Economic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its Political and Security Roles,” *Adelphi Papers*, 275 (March 1993), pp. 54~55.

79) 하딩은 향후 중국의 정책노선을 개혁, 보수, 부패 지향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이들 각각의 경우에 따라 중국의 대외정책이 상이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Harry Harding, “China at the Crossroads: Conservatism, Reform or Decay?” *Adelphi Papers*, 275 (March 1993), pp. 36~48.

2. 동북아질서에 대한 중국의 인식

중국은 냉전체제 붕괴이후 국제질서가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과도기에 처해 있어서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띠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강대국간 이념대립과 군비경쟁이 완화되어 세계대전 발발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나, 민족분규, 영토분쟁 및 종교분쟁 등 냉전시대 잠재되었던 갈등요인들이 새로이 나타남으로써 지역분쟁 발발 가능성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국제정치에서 경제력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방국가간 경제마찰과 개발국과 미개발국간 경제격차 심화로 세계질서가 결코 안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⁸⁰⁾

가. 안보질서

중국은 1990년대 동북아질서가 다극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중국의 안보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동북아에서도 미국의 패권정치가 계속되고 있으며, 일본의 역할증대 움직임과 영토분쟁, 대만문제 및 북한 핵문제 등이 지역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⁸¹⁾ 이와 관련, 중

80) 냉전체제 붕괴이후의 국제질서에 대한 중국의 인식에 대해서는 何方, “冷戰後國際形勢,” 「人民日報」, 1992. 12. 16; 譚取榮, “複雜多變的國際形勢,” 「瞭望」, 1992年 第49期(1992. 12. 7), pp. 35~37 참조.

81) 萬光, “九十年代亞太格局的演變,” 「瞭望」, 1992年 第44期(1992. 11. 2), p. 41.

국의 동북아질서관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중국은 구소련의 붕괴 이후 동북아에서 미·러를 중심으로 한 양극체제가 와해되고 미, 일, 중, 러를 주축으로 하는 다극체제가 새로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로써 미·러가 역내질서를 독단적으로 좌우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지역안정 유지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⁸²⁾ 러시아는 대내 정치·경제적 혼란으로 인하여 대외문제에 대하여 과거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입장이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역내에서 정치·경제·군사적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유일 강대국으로 남아있으나, 냉전시기에 지불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대외문제 보다도 대내문제 해결을 우선시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게 방위분담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필리핀내 기지 폐쇄 등 역내 주둔 미군을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추세에 있다.

중국은 이와 같은 동북아질서의 다극화 추세가 일본과 중국으로 하여금 역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1990년대까지 미국이 동북아에서 세력균형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중국은 러시아의 정치·경제상황이 1990년대 말까지 완전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하여 역내에서 러

82) 다극체제가 양극체제 보다 중국에 유리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Li Zhongcheng and Guo Chuanling, "World Trends 1993,"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vol. 3, no. 1 (January 1993), pp. 4~5 등 참조.

시아의 역할은 계속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⁸³⁾

둘째, 중국은 미·러의 역내 주둔 군사력 철수와 주변국과의 선린관계 강화로 안보환경이 과거 어느 때 보다도 개선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⁸⁴⁾ 러시아는 대내 정치·경제적 위기로 대외 문제에 과거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있고, 아프가니스탄, 몽고 및 베트남 등으로부터 군사력을 철수하였다. 특히 1960년대 이래 소련이 중국안보에 최대 위협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점을 감안할 때, 최근 러시아의 군사력 감축 추세는 북방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을 결정적으로 해소시키고 있다. 또한 대내 경제회복을 최우선적인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미국도 역내 주둔 미군을 감축하고 역내 배치 전술핵 철수를 완료하였는 바, 역내에서 중국의 활동공간이 전례없이 확대되는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 아울러 과거 적대관계에 있었던 러시아, 인도, 베트남, 한국 등 주변국과 관계정상화를 이룸으로써 중국은 안보상 직접적인 위협에서 벗어나게 되었다.⁸⁵⁾

셋째, 중국은 구소련의 몰락으로 미국이 역내에서 유일 강대국으로써 패권을 추구하고, 지역안정에 위협을 미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소련 사회주의 붕괴 이후 중국에 대한 미국

83) 향후 동북아질서가 이와 같은 방향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견해는 민족통일연구원과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워크샵시(1993. 6. 29~30)에도 표명된 바 있다.

84) Liu Huaqiu and Yang Chengxu, "Creating a Peaceful International Environment," *Beijing Review*, November 30 December 6, 1992, pp. 9~11.

85) Chen Qimao, *op. cit.*, pp. 237~41.

등 서방의 「和平演變」 기도가 강화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미국의 대중정책은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은 대만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F-16 전투기 판매 결정, 클린턴 행정부의 대중 인권개선 요구, 영국의 홍콩 민주화 개혁 추진, 프랑스의 대대만 미라주 전투기 판매 결정 등도 중국 사회주의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음모라고 간주하고 있다.⁸⁶⁾

넷째, 중국은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과도기에 일본이 신장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역내에서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 1992년 캄보디아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고 플루토늄을 대량 도입하였으며,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역내에서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해 다자안보기구 설립을 역설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1992년 부시 미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미국과 「세계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하여, 독자적인 방위체제 확립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과거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을 받은 바 있는 중국으로서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있다. 또한 개혁·개방정책 채택 이후 중국은 연안지역을 전략적으로 중시하고 있는 바,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증대 움직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⁸⁷⁾

86) 「從中國威脅論談起」 「文匯報」, 1993. 2. 19 社論.

87) 중국의 대일 경계 태도에 대해서는 Bonnie S. Glaser, "China's Security Perceptions: Interests and Ambitions," *Asian Survey*, vol. 33, no. 3(March 1993), pp. 256~59 참조.

다섯째, 중국은 南沙群島와 釣魚臺列島의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 대만의 분리 독립 움직임 및 북한 핵문제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이익이 위협받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역내에서 지역 강대국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중국은 이들 문제들이 국제화되는 것을 반대하고, 관련 당사자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 역내에서 주도권을 유지·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나. 경제질서

중국은 현 국제경제질서가 미국 경제력의 상대적 약화로 인하여 미국, 일본,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삼극체제로 변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⁸⁸⁾ 또한 중국은 냉전체제 붕괴 이후 국가간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는 한편, 유럽공동체와 북미자유무역지대 창설 및 아세안 자유무역협정 발효 등을 계기로 세계 경제의 지역주의화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국가간 경제마찰이 격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동북아시아에서도 미국경제력의 상대적 약화로 인하여 지역국에 대한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이 강화됨으로써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지역국간 경제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첫째, 중국은 냉전시대 과도한 군비경쟁으로 인하여 미국경

88) 譚取榮, 앞의 글, p. 36; 王和興, “90年代世界經濟的大趨勢,” 「國際問題研究」, 1993年 第2期(1993. 4), pp. 10~12.

제가 침체국면에 놓이게 되었으며, 재정적자와 무역적자 등 구조적 문제가 단기간내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미국경제의 침체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유럽을 대표하는 독일도 국가통합에 따르는 어려움들을 극복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⁸⁹⁾

반면, 중국은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일본의 국민총생산액이 미국의 60%에 이르고 있으며, 일본이 세계 최대 채권국으로서의 경제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현재의 추세대로 미국과 일본이 경제성장을 이룩할 경우 2020년을 전후하여 일본경제력이 미국경제력을 초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⁹⁰⁾ 아울러 중국은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국가들이 계속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다. 요컨대, 중국은 향후 동북아를 포함한 아·태지역 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증대되고, 세계무역의 중심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지역으로 이동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은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 등 경제공세가 적극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미국과 역내국가간 경제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89) 李琮, “風雨飄零又一年,” 「瞭望」, 1992年 第49期(1992. 12. 7), pp. 39~40.

90) 李長久, “世界主戰場轉向經濟領域,” 「文匯報」, 1993. 1. 1.

둘째, 중국은 국가간 이념대결의 종식과 과학기술의 진보로 인하여 국가간 경제적 상호 의존관계가 심화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입각, 중국은 「全方位 對外開放」 방침하에 외국과의 경제교류를 적극 확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아시아지역국가에 대한 수출액이 중국 총수출액의 66.5%를 차지하고 있는 바,⁹¹⁾ 중국은 일본 등 역내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가일층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서방의 보호무역주의화 추세와 대미 갈등관계가 지속 심화될 경우, 역내국가 경제에 대한 중국경제의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중국은 지역경제 블럭화 현상을 1990년대 국제경제질서의 중요한 특징중의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다. 유럽과 북미지역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도 지역경제 블럭화 추세가 진행되고 있으며, 동아시아에서도 일본의 주도하에 「東亞經濟圈」 형성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경제주의화 현상은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에게 적지 않은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은 타 지역의 경제블럭화에 대처하기 위해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을 포함하는 「中華經濟圈」과 일본과 한국 등을 참여시키는 「東北亞經濟協力地帶」 창설을 고려하고 있다.⁹²⁾ 그러나 수출주도형 발전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중국은 역내 경제권이 어디까지나 폐쇄성을 띠기 보다는 개방적 지역주의라는 구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91) 張毅, “中國大步邁向世界貿易強國,” 「瞭望」, 1993年 第20期(1993. 5. 17), p. 9.

92) Chen Jingbiao, “Asia-Pacific Economic Ties Grow Closer,” *Beijing Review*, February 8~14, 1993, pp. 9~10.

입장을 보이고 있다.

넷째, 주로 중국 보수지향적 지도자들은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서방 선진국들의 경제정책이 체제변화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동구 사회주의권의 변혁이래 중국은 서방 선진국들의 이러한 정책을 「和平演變」 정책이라고 간주하여 경계해 왔으며, 동구와 구소련 사회주의체제 붕괴 이후 중국이 「和平演變」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요컨대, 중국은 냉전체제 붕괴이후 서방 국가들이 경제력을 정치적 목적 실현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⁹³⁾

3. 1990년대 중국의 동북아정책

가. 정책기조

1990년대 중국의 동북아정책 기조는 첫째, 대내경제 건설을 위한 개혁·개방정책 수행에 유리한 주변환경을 조성하고, 둘째, 경제력과 군사력 증강을 통해 역내에서 강대국으로서의 영향력을 유지·확대하는 것이다.

(1) 역내 평화와 안정유지

중국은 현재 대내경제 발전을 최우선적인 정책목표로 설정하

93) 이에 대해서는 王和興, 앞의 글, pp. 12~14 참조.

고 있는 바, 평화롭고 안정적인 주변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동북아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정책기조는 중국이 「평화」와 「발전」을 1990년대 양대 국가목표로 추구하고 있는 점에서도 명백히 표출되고 있다.

만약 동북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국은 필연적으로 미, 일, 러 등과 긴장관계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많으며, 2000년대 까지 중국이 달성하고자 하는 경제적 목표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동북아는 미, 일, 중, 러 등 4강의 이익이 교차되는 지정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바, 동북아 국제질서의 안정유지는 중국의 안보유지 뿐만 아니라 경제이익 실현을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하다.

이와 관련, 중국은 러시아 등 독립국가연합과 관계를 정상화하였고, 일본과 상호 방문외교를 통해 정치·경제적 협력관계를 강화하였으며, 과거 갈등관계에 처해 있었던 인도와 베트남 등 과도 국교를 정상화하였다. 1992년 8월 중국이 북한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과 국교를 정상화한 것도 주변국과 선린관계 강화를 통해 평화로운 대외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책기조하에서 취해진 결정으로 분석된다. 또한 동북아질서 안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 등 북한의 비이성적인 정책자세에 대해서도 중국은 과거의 입장을 수정,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하고 있다.⁹⁴⁾ 중국의 이러한 태도변화는 북한의

94) 중국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에 묵시적 찬성 입장을 보인 바 있으며, 錢其琛 외교부장의 방한시(1993. 5. 26~29)에도 동북아 정세안정을 위해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東亞日報」, 1993. 5. 28.

핵무기 보유가 역내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을 고무시킬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 한편, 중국은 캄보디아의 평화정착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크메르루즈 등 특정 정파에 대해 지지입장을 취하지 않고 중립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캄보디아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하였던 바 있다.

(2) 지역 강대국으로서의 영향력 확대

중국의 중장기 동북아정책 기조는 역내 강대국으로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개방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도 경제력 등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증강하여 南沙群島와 釣魚臺列島 등에 대한 영유권을 확보하고, 홍콩과 대만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고, 역내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중국이 「全方位 外交」를 주창하고 있는 점도 역내국가들과 선린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역내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중국은 북한 핵문제와 캄보디아문제 등 지역문제 해결과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동북아에서 발언권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최근 방대한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군 장비 현대화를 적극화하는 등 군사력 증강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南沙群島와 釣魚臺列島를 중국영토로 규정하는 「영해법」을 제정한 바 있고, 해·공군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모두 지역 강대국을 지향하는 중국의 정책목표와 연관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정책내용

1990년대 중국은 동북아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역내 강대국에 대해 사안에 따라 협력과 경쟁을 병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은 미, 일, 러 등 강대국간 상호 견제를 통해 역내 세력균형을 기하고 지역분쟁 해결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1) 대미정책: 패권 견제와 협력 추구

경제건설을 위해 주변환경의 안정을 바라고 있는 중국은 역내에서 유일 강대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 갈등관계를 심화시키기 보다는 가능한한 협력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대미 관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 러시아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 약화됨으로써 중국은 미국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감소되었으나, 대내 경제발전과 역내안정 및 대일 견제를 위해 여전히 미국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미국에 대해 선별적으로 타협정책을 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가속화될 경우 중국은 對美 협력을 적극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⁹⁵⁾

95) 중국의 대내 정치·경제상황과 대외정책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Harry Harding, "China at the Crossroad: Conservatism, Reform or Decay," *Adelphi Papers*, no. 275(March 1993), pp. 36~48 참조.

구소련 붕괴이후 미국이 동북아에서 유일 패권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국은 대미관계를 중시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중국은 역내에서 미국의 패권정책이 중국 사회주의 체제유지와 역내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지역분쟁 해소 및 쌍무간 정치·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해 미국과 사안별로 협력하는 정책자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중국의 현 개혁파 지도자들은 미국과 주권존중 및 상호내정불간섭 원칙에 입각하여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⁹⁶⁾

1990년대 중·미관계에 있어서 현안이 되고 있는 사안들은 지역안정 유지문제, 인권문제, 대만문제 및 통상문제 등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1990년대 중국의 대미정책을 분석·전망하기로 한다.

첫째, 지역안정 문제와 관련 1990년대 중·미간 마찰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문제는 미국의 유일 패권국 지위 유지, 일본의 역할증대 움직임 및 중국의 군사력 증강 등이다. 이들 문제를 둘러싸고 중·미간에 긴장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으나, 대내 경제발전을 최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가능한한 미국에 대해 실리위주의 정책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⁹⁷⁾

96) “江澤民縱論中美關係等七大問題,” 「人民日報」, 1993. 3. 9; 「江澤民倡中美改善關係,” 「文匯報」, 1993. 5. 23.

97) 이와 관련, 1992년 말 중국외교부는 대미정책 추진시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정책보고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田眞, “外交部對中美關係的秘密報告,” 「爭鳴」, 1992年 11月號(1992. 11), pp. 32~33.

중국은 구소련 붕괴이후 미국이 동북아에서 유일 패권국 지위를 유지하는 세력으로 남아 있다는 점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 초래 등 지역갈등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력에 대처, 중국은 일본, 러시아, 한국 등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미국을 견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⁹⁸⁾ 한편, 과거 일본의 침략을 받은 바 있는 중국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역할증대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은 주일 미군이 철수할 경우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필수적으로 뒤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 일본에 미군이 당분간 계속 주둔하기를 바라고 있다.

아울러 급속한 군사력 현대화가 지역국의 불안을 야기할 것으로 인식하여 중국은 군사력 현대화 작업이 결코 역내 세력균형 변화를 초래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최소한도의 자위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⁹⁹⁾ 향후 동북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역불안 요인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은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해 나갈 것이나, 주변국과의 선린관계 유지, 특히 미국과의 관계악화를 피하기 위해 주변국으로부터 심각한 우려를 야기할 정도로 단기간내에 군사력을 강화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지역안정을 위협하는 국가에 대한 무기수출 문제

98) 中國社會科學院 亞·太研究所, 「有關日美關係的趨勢分析與中國因應對策之建議」, 邱榮金, “從江澤民的日本之行看中共與日本的關係,” 「問題與研究」, 第35卷 第7期 (1992. 7), pp. 49~50에서 재인용; 王芳, “中國의 新국제외교정책,” 「世界日報」, 1993. 1. 21.

99) 穆惠民, “中國軍事威脅毫無根據,” 「人民日報」, 1993. 4. 17.

가 대미관계 경색요인의 하나로 작용해 왔던 점을 감안, 중국은 북한 등에 대한 무기수출을 가능한한 자제할 가능성이 많다.¹⁰⁰⁾

이와 같이 중국은 지역안정 유지를 위해 미국과 대결하기 보다는 협력을 우선시하는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금세기 말까지 대내 경제발전을 최우선적인 정책목표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바, 지역분쟁을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을 강조하고, 지역분쟁 해결과정시 미국에 협조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¹⁰¹⁾

둘째, 중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미국의 간섭과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지도 향후 중·미관계 개선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중국은 미국이 인권보호를 대외정책의 중요한 가치의 하나로 추구하는 목적이 중국내 정치·경제적 자유화 세력에게 미국의 가치관을 주입시켜 미국식 민주주의를 수용하도록 하려는 등 내정간섭을 위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¹⁰²⁾ 따라서 중국은 중국내 인권문제는 중국내정 문

100) 중국은 이미 1992년 2월 21일 미사일기술통제체제를 준수할 것을 미국에게 서면으로 약속한 바 있고, 동년 3월 9일에는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군사력을 점차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군현대화를 위해 대외무기 판매를 통한 재원 확보가 필요한 만큼 중동지역 등에 대한 무기판매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국의 대외 무기 판매문제는 앞으로도 중·미간 대립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101) 중국의 이러한 정책자세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선언을 철회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미국의 외교적 노력에 동조하였던 사실을 통해서도 나타난 바 있다.

102) 評論員, “借人權干涉別國內政不得人心,” 「人民日報」, 1993. 3. 12; 唐天日, “兩種不同的人權觀,” 「文匯報」, 1993. 6. 14.

제이프로 타국이 간섭할 성질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요구에 대해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실제로는 미국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대미관계 개선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은 일부 정치범을 석방하고 죄수에 의해 생산된 상품을 미국에 수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던(1992. 8. 8) 바 있다.

인권문제와 관련 미국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클린턴이 대통령 경선시의 대중 강경입장을 다소 완화하고 있고, 미국내 대중 정책 실무자들이 중국에 대해 무리하게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역행한다는 점을 주장함으로써 점차 완화되고 있다.¹⁰³⁾ 또한 대내 경제발전과 2000년 올림픽 유치 등을 위해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앞으로 미국의 인권개선 요구를 중국내정에 대한 간섭이라고 비난하면서도 일부 정치범을 선별적으로 추가 석방하는 등 유연한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지원과 홍콩의 정치개혁에 대한 미국의 지지태도에 대해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중·미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만과 홍콩문제를 내정문제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103) Harry Harding, *A Fragile Relationship: The United States and China since 1972*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2), pp. 340~45.

대만과 홍콩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원을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하여 왔다. 특히 1992년 부시 행정부가 대만에 F-16 전투기 판매를 결정한데 대해 중국은 중국을 분할 관리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으로 판단하여 미국을 강력 비난한 바 있다.¹⁰⁴⁾ 또한 중국은 패튼 홍콩총독의 민주화 개혁 주장에 대한 미국의 지지태도에 대해서도 내정간섭 행위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국양제」 통일방안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은 대만과 홍콩에 대한 미국의 이익을 존중해 주면서 대만과 홍콩의 자치권을 제한적으로나마 부여해 주고 무력에 의한 통합 보다는 기능주의적인 통합노력을 우선시함으로써 통합에 따르는 문제를 최소화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중국의 대미 통상정책이 어떻게 구현될 것이지도 중·미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냉전체제 붕괴이후 군사력 보다 경제력이 중시되고 있으며, 중·미 양국이 서로 상대방을 경제적으로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중국이 경제건설을 위해 미국의 자본과 기술 지원 및 시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장개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도 중국의 경제개혁을 통해 중국의 정치체제 변혁을 유도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중·미간 경제협력 관계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104) 關文亮, “美因素如何影響臺局,” 「文匯報」, 1993. 2. 4.

관련, 중국은 미국과 지적소유권 보호 협상과 시장개방에 관한 협상을 타결지은 바 있고, 대외 무역체제 개혁과 구매 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대미 무역 흑자폭을 축소함으로써 대미 경제관계 개선을 추구하고 있다.

(2) 대일정책: 경쟁적 공존관계 유지

중국은 대내 정치·경제적 목표 달성과 대서방 관계개선의 중개자로 활용하기 위해서 고위 지도자 상호 교환 방문 등을 통해 대일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역내에서 일본의 역할증대 움직임, 釣魚臺列島의 영유권 분쟁, 중국에 대한 일본의 소극적인 투자·기술이전 및 동남아에서 중·일간 경쟁 등은 중·일관계 진전에 장애가 될 것이다. 특히 역내에서 미·러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일이 역내 역할 증대를 모색하고 있는 바, 1990년대 중·일관계는 경쟁적 공존의 양상을 보이면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안보면에서 볼 때, 중국은 일본과 협력하는 것이 중국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많다. 중국은 현국제질서가 다원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이 유일 패권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미국의 「和平演變」 정책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과 안보전략적 협력 구축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¹⁰⁵⁾ 또한 개혁·개방정책 추진을 위해 안정적인 주변환경을 필

105) Xu, Zhixian, "Sino-Japanese Relations Continue Enhanced," *Beijing Review*, October 12~18, 1992, p. 20; 中國社會科學院 亞·太研究所, 앞의 글.

요로 하고 있는 중국은 역내 정치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일본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 중국은 일본 자위대의 캄보디아 파병을 묵인한 바 있고, 錢其琛의 방일(1993. 5. 29~6. 1)을 통해 북한 핵문제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는 한편, 중국의 국방비 증액에 대한 일본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미·일 주도하에 지역안보협의체가 형성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안보대화를 추진할 것에 합의하였다.¹⁰⁶⁾

그러나 중국은 일본의 정치대국화가 지역안정에 공헌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지역세력균형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여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은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을 공식적으로는 지지한다는 입장이나, 실제로는 역내문제에 대한 일본의 발언권 강화를 염려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¹⁰⁷⁾ 또한 중국은 1990년대들어 역내 역할증대 차원에서 일본이 적극 주창하고 있는 지역 다자안보협의체 형성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와 같은 형태의 포괄적인 지역 안보협의체 형성문제에 대해서는 동북아시아가 지닌 특수한 사정을 이유로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¹⁰⁸⁾ 중국이 일본 주도의 지역

106) 「人民日報」, 1993. 6. 1.

107) 이에 대해서는 錢其琛 중국외교부장의 한, 일 방문이전 기자회견 내용과 李肇星 유엔주재 중국 대사의 기자회견 내용 참조. 「人民日報」, 1993. 5. 25; 「文匯報」, 1993. 6. 18.

108) Li Luyue, "Current Situation in Northeast Asia," *Beijing Review*, August 19~25, 1991, p. 8. 이봉 총리는 1993년 6월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수상의 방중시 지역

안보협의체 형성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역내에서 일본의 영향력 확대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중국은 미, 러시아 및 한국 등과 안보협력 구축을 통해 일본을 견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 7월 총선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일본에서 대외협력과 역내 역할증대를 보다 강력하게 주장하는 정치세력들의 발언권이 제고되고 있다는 점, 중국에서 개혁에 따른 문제점이 심각하게 부각될 경우 보수파 지도자들의 입지가 강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통해서 볼 때, 향후 釣魚臺列島의 영유권 문제 및 동남아와 한반도 등에서 영향력 확대 경쟁으로 중·일관계가 경색될 소지도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중국은 대내 경제발전을 위해 일본과 협력 필요성을 갖고 있고, 일본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 등 역내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 지역 경제협력체 형성을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1990년대 중·일관계에서는 갈등과 협력적 측면이 병존하게 될 전망이다.

(3) 대러정책: 선린관계 강화

러시아는 대내 정치·경제적 혼란으로 인하여 대외문제에 대해 적극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다자안보협의체 형성 필요성에 동의한 바 있다. 중국이 역내 다자안보협의체 형성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중국의 군사력 증대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견제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주변환경의 안정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군사적으로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가 정치·경제적 안정을 회복할 경우 동북아에서 과거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은 국가안보를 위해 러시아와 선린관계 유지 필요성을 갖고 있다.

우선 세계전략적 차원에서 중국은 러시아와 안보협력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다. 구소련 붕괴 이후 미국 등 서방의 대중 「和平演變」 정책이 강화되고 있고, 역내에서 일본의 정치·군사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바, 중국은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정치·군사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은 1992년말 열린 방중시 러시아와 정치·군사적 영역에서 우호협력을 강화할 것에 합의하였던 바 있다.¹⁰⁹⁾

특히 중국은 南沙群島의 영유권 확보와 홍콩과 대만의 주권 회복 등을 통해 2000년대 세계적 강대국으로 도약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적 국가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은 현재 국방비를 대폭 증액함으로써 국방 현대화를 기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자체기술에 의해서는 현대전쟁에 대처할 수 있는 군사무기를 개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다량의 첨단무기 구입을 계획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까지 러시아로부터 SU-27 전투기 24대와 공중급유기술 등 첨단군사 무기기술

109) 「人民日報」, 1992. 12. 19.

을 도입한 바 있고, 향후 미그 29기와 디젤잠수함 등을 도입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¹⁰⁾ 미국의 대중 압력이 강화되고 일본의 정치·군사 대국화 행보가 가속화될 경우 중국의 대러 정치·군사협력 추구노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주변국과 선린관계 유지를 핵심 외교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은 러시아와 국경문제를 완전 타결짓기를 바라고 있다. 과거 중·소간 무력충돌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국경문제는 1991년 江澤民의 방소시 체결된 동부국경선문제에 관한 협정을 계기로 더 이상 양국관계를 경색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고 있다.¹¹¹⁾ 그러나 러시아가 대내 안정을 회복하고 적극적인 대외정책 자세를 취할 경우 러시아는 국경선 문제에 대해 보다 강경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키르기즈와 카자흐 등 회교도가 新疆省内 소수민족의 독립운동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도 서부지역 국경선 문제를 타결지을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은 러시아와 국경선문제에 관한 회담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대러 선린관계를 유지해 나갈 전망이다. 아울러 중국은 러시아로부터의 군사위협을 완화하기 위하여 변경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양국 병력이 점진적으로 감축되도록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¹¹²⁾

110) FBIS, *Daily Report, China*, December 21, 1992, p. 9.

111) 중·소 동부국경선협정 전문은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公報」, 1992年 第4期(1992. 3. 25), pp. 103~11 참조.

112) 이에 대해서는 1992년 12월 18일 중·러 기본관계에 관한 공동성명문 참조 「人民日報」, 1992. 12. 19.

중국이 변경지역까지 대외개방구로 지정하는 등 경제발전을 최우선적인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있고,¹¹³⁾ 러시아 역시 경제문제 해결을 핵심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중·러간 경제협력 관계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중국은 이미 러시아와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1992. 3)과 노무협력에 관한 협정(1992. 5) 등을 체결한 바 있고, 옐친 방중시(1992. 12) 상호 경제발전과 무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던 바 있다. 최근 중국의 이러한 노력결과 1992년 중·러간 교역액이 전년 대비 50% 증가한 58억 5천만 달러에 달하여 중국은 러시아의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 부상하였다.

4. 동북아질서 재편과정에 미칠 영향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가속화하여 경제력을 신장시키고 군사력을 강화할 경우 중국은 1990년대 동북아 신질서 형성과정에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역내에서 중국의 정치·군사적 지위가 제고됨에 따라 지역문제 해결과정에서 중국의 발언권이 확대될 것이다. 반면, 러시아의 대내 정치·경제적 혼란이 단기간내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냉전 이후 시대 퇴색되고 있는 군사적 영향력을 제외한 러시아의 역할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냉전과 탈냉전의 이중구조

113) 중국은 1992년 5월 확정된 전방위 대외개방 방침에 입각하여 흑룡강, 내몽고, 신장성 등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도시들을 「변경경제 협력구」로 지정하였다.

가 병존하는 과도기의 동북아질서는 대체적으로 균형자 역할을 담당해 온 미국과 중국 및 일본에 의해서 主導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 정치·안보질서

금세기 말까지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을 지속함으로써 국력을 증강시키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은 주변국과 선린관계를 강화하는 등 안정적이며 평화로운 대외환경을 조성하는데 외교정책의 주안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의 성공적 추진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 공업국과 경제협력을 발전시킬 필요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도 역내 세력균형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미국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정치·군사적 역할 확대를 추구하고 있는 일본과도 안보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국은 주변국과 선린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한편, 미국과 일본의 패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군사대국 러시아와 연합전선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국은 인도와 베트남 등 주변 경쟁국과도 협력적인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마찰을 피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¹¹⁴⁾ 이와 같은 중국의 현실적이며 타협을 중시하는 외교정책은 지역안정 유지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114) 이와 관련, 중국은 주변국과의 갈등을 대화와 협상에 의해서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을 누차 천명한 바 있다.

또한 중국은 현재 국방현대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1990년대 까지 중국이 미국이나 러시아에 필적할 수 있을 만큼 첨단무기로 무장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개혁·개방정책 추진 결과 많은 혜택을 입은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방세력과 대부분의 국민들도 군사력 증강이나 대외 팽창정책 보다는 경제력 신장과 대외 협력정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개혁·개방 가속화는 동북아 정치 안보질서 재편 과정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혁·개방정책 가속화에 따라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 약화, 지방분권화, 부패, 경기과열, 범죄 등 정치·경제·사회적 부작용과 혼란이 심화될 경우 중국에서 군부를 비롯한 보수성향의 지도자들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수파의 득세는 대외 협력을 중시하는 지방정부의 권한 약화를 초래하는 반면, 중앙정부의 권한 강화로 나타날 수 있다. 중국지도부의 보수화는 중국으로 하여금 대외 강경노선을 채택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대만·홍콩문제와 영토문제 등 주권과 관련된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며, 인권개선 요구 등 미국의 대중정책에 비타협적인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¹¹⁵⁾ 중국의 이러한 대외정책 자세는 결국 중국과 미·일관계를 경색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고, 역내질서 불안을 초래하는 결과

115) 그러나 중국은 역내 정세안정을 최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등 서방에 대해 적대정책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다. Harding, *op. cit.*, pp. 39~40.

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혁·개방정책이 성공하여 경제·군사적 강대국으로 부상할 경우 중국은 민족주의 기치하에 대외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¹¹⁶⁾ 특히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南沙群島 등 南海와 東海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시킬 것이며, 이는 중동지역으로부터 전략물자를 수입하고 있는 일본 등 동북아시아지역국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또한 미국으로 하여금 일본의 군사력 증대를 용인하도록 함으로써 역내국가들의 군비증강을 자극할 것이다.¹¹⁷⁾ 따라서 중국의 개혁·개방 가속화가 장기적으로 동북아질서 불안을 야기하는 잠재요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동북아시아 국가간 신뢰 강화와 군비통제를 위해 지역 다자안보협의체 형성에 관한 논의가 더욱 구체적으로 개진될 전망이다.

나. 경제질서

중국지도부 사이에서는 개혁·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제력을 발전시켜야 한다는데 대해 대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일부 서방국들이 예상하는 바와 같이

116) 개혁·개방 가속화는 장기적으로 사회주의 이념 약화를 초래할 것이며 사회주의에 대한 대체 이념으로서 민족주의가 강조될 가능성이 있다. Joffe, op. cit.

117) 이와 관련, 1990년대 들어 아시아국가들이 세계 최대 무기수입 시장이 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아시아국가들이 세계무기 수입 총액의 약 35%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Michael T. Klare, "The Next Great Arms Race," *Foreign Affairs*, vol. 72, no. 3(Summer 1993), pp. 136~152.

1990년대 중국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과 견줄 수 있는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¹¹⁸⁾ 중국은 1990년대 말까지 어느 정도 풍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小康段階」를 실현하는 등 중등 경제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가속화와 이에 따른 경제력 신장은 중국으로 하여금 서방경제체제에의 편입을 촉진시킬 것이며 세계경제에서 동북아시아의 비중을 제고시킬 것이다.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생산력을 증대하고 국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는 주변국들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할 필요가 있다.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중국은 일본과 한국 등 역내 경제대국들과 경쟁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미국 등 서방 선진국들과도 교역관계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와 관련, 중국은 대외정책 결정시 경제적 이익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대외무역체제를 기존 국제경제질서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개혁함으로써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등 국제경제기구에의 가입을 적극 모색할 것이다.¹¹⁹⁾ 중국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중국이 현재의 추세대로 대외무역체제를 개혁할 경우 적어도 1990년대 중

118) 이에 대해서는 William Pfaff, "China: Superpowerdom Isn't Around the Corner,"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ly 26, 1993 참조.

119) 1992년 중국이 「전방위 대외개방」 정책을 채택한 이유의 하나가 통일적인 대외 무역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가트 가입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반까지 중국의 가트 가입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가트 가입은 중국의 세계경제체제에의 편입을 더욱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중국은 유럽공동체와 북미자유무역지대 창설 등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경제지역주의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국들과의 경제협력을 특히 강조할 것이다. 중국은 중국 남부와 대만 및 홍콩을 포함하는 「華南經濟圈」, 한국과 일본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東北亞經濟圈」 구축을 적극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 등 서방국과의 경제협력을 곤란하게 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여 유럽공동체와 같이 역외 지역에 대해 배타적인 성격을 지닌 지역경제권 형성 구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다. 중국은 역외국가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형태를 지닌 지역경제권을 형성하고자 할 것이다.¹²⁰⁾ 이와 관련, 중국은 현재 역외국가들에 대해서 개방적인 아·태경제협력 각료회의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데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며 아시아경제협력회의(EAEC) 창설 구상에 대해서도 지지하고 있다.¹²¹⁾

120) 陳莊, “中國的對外開放與東亞經濟,” 민족통일연구원 주최 제1차 한·중 학술회의 발표논문(1993. 6. 29~30), p. 6; 張忠義, “探索亞太經濟合作的新模式,” 「瞭望」, 1993年 第23期(1993. 6. 7), p. 45.

121) 「文匯報」, 1993. 5. 17. 그러나 중국은 금년 7월 클린턴이 東京에서 제안한 바 있는 아·태경제협력 각료회의의 정상회담 격상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이 클린턴의 주장을 역내에서 미국의 패권을 지속하기 위한 의도로 평가하고 있으며, 대만과 홍콩의 아·태 경제협력 각료회의 정상회담 참가가 이들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文匯報」, 1993. 7. 16.

이와 같은 중국의 대외경제정책을 감안해 볼 때, 1990년대 동북아지역국간 경제협력관계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의 경제개혁·개방정책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중국과 지역국간 교역이 확대되고 한국과 일본 자본의 대중국 투자가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중국과 지역국간 경제적 상호의존관계 심화는 지역경제 통합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지역에서는 경제발전 정도의 차이와 상호 상대방에 대한 경계 등으로 인하여 유럽공동체와 같은 형태의 제도화된 경제권이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의 개혁·개방 가속화와 이에 따른 경제력 신장은 장기적으로 중국과 역내국가간 경제적 경쟁을 유발시킬 가능성도 있다. 특히 역내 경제협력체 형성과정에서 중국과 일본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립할 가능성이 있고, 미국과 유럽 등 지역에서 시장확보 문제와 관련 중국과 역내국가간 경쟁이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가속화는 동북아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역내국가간 경제협력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第Ⅳ章 중국의 개혁·개방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과 한국의 대응

1. 한반도문제에 대한 중국의 기본입장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요인으로 인하여 한반도는 중국에게 있어서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략 요충이다. 따라서 중국은 전통적으로 한반도를 안보전략적 완충지대로 인식하여 한반도가 중국에게 적대적인 세력에 의해 지배되는 것을 반대하여 왔으며, 한반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1950년 중국의 한국전 개입,¹²²⁾ 냉전시대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보를 위한 대북 정치·경제적 지원, 최근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과 북한-미·일 접촉 및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신중한 정책자세 등을 통해서도 한반도문제에 대해 중국이 취해왔던 기본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향후 한반도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가속화 뿐만 아니라 중국내 정치체제의 변화, 역내 세력균형의 재편 및 중국경제 발전에 있어서 한국경제가 가지는 중요성 증대 여부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내 경제건설을 위해 평화로운 주변환경을 요구하고 있는 중국은 기본적으로 남북한간 평화공존을 통한 현상유지를 희망할

122) 錢其琛 중국외교부장은 한국방문(1993. 5. 26~29)에 앞서 행한 기자 회견을 통해 중국의 한국전 참전은 중국의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東亞日報』, 1993. 5. 25.

것이며, 한반도가 어느 한 강대국에 의해 독점적으로 지배되는 것을 반대하고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모색할 것이다.

이와 관련, 통일문제, 남북대화, 주한 미군문제 및 북한 핵문제 등 주요 한반도문제에 대한 중국의 기본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 통일문제와 관련,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이 가져올 불확실한 미래를 우려하여 한반도 통일의 조기 실현 보다는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통한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선호하고 있다.¹²³⁾ 또한 중국은 한반도문제에 대한 주변 강대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남북한이 중국에 요구하는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도 한반도 통일문제가 한민족 내부문제라고 주장하고 남북한 쌍방간 협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¹²⁴⁾ 그러나 중국은 향후 대일 견제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강력한 통일한국이 출현하는 것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¹²⁵⁾

둘째, 한반도의 안정유지를 바라는 중국은 남북한간 대화를

123)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은 남한에 의한 북한의 흡수통일 방식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며, 통일과정에서 무력충돌을 완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현단계에서는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張武, “朝鮮半島局勢發展的前景,” 「國際展望」, 1993年 第1期 (1993. 1. 8), p. 8.

124) 중국은 한·중 수교 이후에도 한국이 중국 보다는 미, 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의 이러한 대외인식이 변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瑞昌, “中國學者的 韓國觀,” 「中蘇研究」, 第16卷 第4號 (1992/3 겨울), p. 214.

125) Jia Hao and Zhuang Qubing, “China’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Asian Survey*, vol. 32, no. 12 (December 1992), p. 1156; Robert G. Sutter, “China in World Affairs — Background, Prospects and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CRS Report for Congress, 92-747 S* (October 1, 1992), p. 18.

통해 한반도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남북한이 대화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통일을 위해 가장 시급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¹²⁶⁾ 이와 관련, 중국은 1991년 9월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을 위한 역할 및 최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한 접촉 필요성에 대한 지지 입장을 통해서도 보여준 바와 같이 남북한간 관계개선을 위해 직·간접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셋째, 주한 미군 및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다. 중국은 주한 미군이 한반도 및 동북아질서의 안정유지 세력으로 기능하고 있는 측면도 있으나, 냉전체제의 와해로 더 이상 주둔 명분이 없으며 대만 및 홍콩에 대한 주권회복과 역내 영향력 확대 등 중국의 이익을 저해하는 측면이 더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¹²⁷⁾ 또한 중국은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이 북한으로 하여금 경직된 정책자세를 견지하도록 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對中 견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¹²⁸⁾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정책변화를 유도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미군이 점진적으로 철수되고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도 중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126) 徐寶康, “朝鮮民族的宿願:和平統一祖國,” 「人民日報」, 1991. 10. 10.

127) Shambaugh, op. cit., p. 98.

128) 「人民日報」, 1993. 3. 12.

보이고 있다.

넷째,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입장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이 일본과 한국 등 주변국의 핵개발을 자극하는 등 역내 질서를 위협할 것으로 판단,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북한간 이념적 연대성과 북한이 중국에게 있어서 차지하는 전략적 가치를 고려하여 중국은 관련 당사국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제재를 통한 해결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¹²⁹⁾ 이와 같은 입장을 통해서도 중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미국 등 서방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등 곤란한 입장에 처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대북한 관계 악화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 상실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요컨대, 중국이 현재 경제발전을 위해 주변정세의 안정을 희구하고 있고,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증대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남북한관계가 동북아질서 안정에 미칠 영향이 심대할 것이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중국은 한반도가 가지는 전략적 중요성을 경시하지 못할 것이다.

2. 중국의 대한반도정책 전망

중국은 전통적으로 한반도를 자신의 세력범위로 간주하여 한

129) 「文匯報」, 1993. 5. 25; 「人民日報」, 1993. 5. 29; 「人民日報」, 1993. 6. 13.

반도의 안정유지를 희망하였으며, 한반도의 불안정은 중국적으로 자신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식하여 한반도와 중국관계를 「脣齒關係」로 표현해 왔다. 한반도의 안정유지를 바라는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중국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유지를 지원하면서도 한반도의 불안을 자극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으며, 한국과 국교를 정상화함으로써 한반도의 두개 한국을 정식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한 당사자간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남북대화의 진전을 직간접적으로 지지·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반도에 대한 기본인식을 통해서 볼 때,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유지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한반도정책 기조로 설정하고 있다¹³⁰⁾. 이와 관련, 향후 중국은 남북한에 대해 등거리정책을 채택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받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중국과 북한관계의 변화가 예상되며, 중국은 한국과 경제·정치적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가속화될 경우 중국은 북한보다는 남한과의 관계발전을 중시할 가능성이 많다.

가. 중국과 북한관계 변화 가능성

1992년 8월 중국은 북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국교를

130) Jia and Zhuang, op. cit., p. 1142.

정상화하였다. 1991년 무역대표부의 교환 설치 이후 한·중 수교는 이미 가시권내에 들어서게 되었고, 북한도 결국 이러한 추세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¹³¹⁾ 그러나 한·중 수교는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인 바, 북한은 한·중 수교의 시기를 북-미·일 관계개선 이후로 미뤄주도록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중 수교가 북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중국은 사전에 북한에게 충분한 양해를 촉구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한·중 수교에 대한 반대급부 차원에서 북한에게 경제적·외교적 지원과 지지를 약속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수교는 중국과 북한관계 변화를 가속화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 수교 당일 중국외교부 대변인 吳建民과 黨總書記 江澤民이 한·중 수교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북한간 기존 우호관계가 하등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¹³²⁾ 그러나 젊고 개혁지향적인 인사들이 전면에 부상하게 된 14차 당대회와 8기 전인대 이후 중국과 북한관계는 냉각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아울러 한·중 수교 이후 중국과 한국간의 정치적·경제적 접촉과 협력의 증대도 중국의 대한반도정책 조정을 유도하는 촉매가 될 것으로 보인다.

131) 1991년 10월 김일성의 방중 및 1992년 4월 楊尙昆의 방북시 중국은 북한에게 한·중 수교의 불가피성을 설명하였고, 북한은 중국의 이러한 입장을 이해하면 서도 수교시기를 늦춰주기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32) 「文匯報」, 1992. 8. 24.

이와 관련, 중·장기적으로 중국과 북한의 고위 지도자간 유대 관계 약화가 예상되며, 중국은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정치·경제적 지지나 지원정책을 수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홍콩에서 보도된 바 있는 李鵬 총리의 한반도정책 관련 담화는 그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李鵬은 1993년 2월 초 중국외교부 회의시 중국의 대한반도정책 기조를 다음과 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첫째, 중국은 더 이상 북한과 정치·군사적 협의를 갖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비밀접촉 등을 승인하지 않는다. 둘째,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며 이 지역에서의 핵무기 개발과 외국의 핵무기 비축을 반대한다. 셋째, 중국은 북한에 선진 군사장비를 제공하지 않는다.¹³³⁾

개혁·개방정책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은 북한보다는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 할 것이며, 대북한 경제지원을 축소 할 것으로 보인다. <표 4-1>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중국은 최근 까지 북한에게 우호가격으로 제공해 주었던 원유 및 식량 공급 정책을 철회하고 있으며,¹³⁴⁾ 1991년 1월 26일 북한과 체결한 「무역협정」을 바탕으로 북한에게 경화결제 방식에 의한 무역거래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북한의 對中國 교역비중이 약 25%를 점하는 바, 구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의 경제적 지원이 중단된 상황에서 중국의 대북한 경제지원 축소는 북한의

133) 「鏡報」, 1993年 3月號, p. 51.

134) 중국의 대북한 수출 원유의 톤당 단가가 1990년에는 58달러였으나 1991년에는 126달러로 두배 이상 급등하여 종래의 우호가격이 국제시장가격(톤당 131달러)에 근접하고 있다.

경제난을 심화시킬 것이다.

<표4-1> 중국의 대북한 원유 수출

구 분	단 위	1980	1987	1988	1989	1990	1991
수 량	천톤	1223	1237	1202	1073	1063	1102
금 액	천달러	78495	78201	75534	64600	61310	139347
단 가	달러/톤	64	63	63	60	58	126

출처: 「内外通信」, 週刊版, 제848호 (1993. 5. 20), P. 6.

중국과 북한간 정치·외교적 분야의 관계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개혁·개방정책의 심화에 따라 중국에서는 사회주의 이념의 중요성이 더욱 감소될 것이며, 이는 중국과 북한간 기존 이념적 연대감을 약화시킬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유지, 북한의 대남정책 및 북한의 대외정책에 대한 지지정책을 수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한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유지되기를 바라면서도 북한 사회주의를 북한의 내정문제로 규정하면서 김일성 부자세습 등 북한정권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³⁵⁾ 북한의 핵개발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은 이 문제가 일본 및 한국의 핵보유를 자극하도록 하여 동북아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조성되고 있는 역내 불안에

135) 이 점은 당초 김정일이 금년 3월 8일 북경을 방문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접촉수준 및 방문지역 등에 대한 이견으로 방중이 실현되지 않았던 사실로 부터서도 유추가 가능하다.

대해 중국은 우려하고 있으며,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계속 주장하고 북한 핵문제가 협상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이 북한의 핵정책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고 평가된다.

중국은 또한 북한의 비타협적인 대남정책 자세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지지태도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히려 중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에 대해 현실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종용함으로써 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은 북한의 대외정책 특히 대미·일관계 개선 노력이 실현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한의 대미·일관계 개선을 북한 사회주의 체제유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미관계 및 중·일관계에 내재되어 있는 갈등요인 및 불확실성 그리고 중·북한관계 변질로 중국이 북한과 미·일관계 개선을 증재할 수 있는 역량은 점차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개혁·개방정책이 가속화될 경우 중국은 북한을 혈맹으로서 보다는 자국의 정치 및 안보전략적 이익을 위한 우호협력의 대상으로 간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동북아 및 한반도에서 영향력 증대를 꾀하고 있는 중국은 당분간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고려하여 북한과 정치·군사적 협력관계를 경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¹³⁶⁾

136) 중국은 북한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대남한 정책상 유리하며, 역내에서

나. 중국과 한국관계 발전 전망

개혁·개방정책 가속화에 따라 장기적으로 중국은 북한과의 정치·군사적 유대관계 보다는 한국과의 경제협력 증진을 중시하게 될 것이다. 한·중 수교와 시장경제 요소 도입을 역설한 14차 당대회 이후 중국과 한국간 경제교류가 대폭 확대되고 있으며,¹³⁷⁾ 경제교류의 축적을 바탕으로 신뢰감이 형성되어 정치·외교적으로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모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국은 경제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일본의 對中國 투자를 유도하는 촉매제로 이용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¹³⁸⁾ 아울러 자국 주도하의 지역경제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중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은 북한의 한국전 승리기념 40주년 행사 축하를 위해 정치국 상무위원 胡錦濤 및 국방부장 遲浩田 등을 대표단으로 파견하여 중·북한간 유대관계를 강조한 바 있다.

- 137) 1992년 한·중 교역규모가 82억 달러를 기록, 중국은 미, 일에 이어 한국의 3대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였으며, 한국 역시 중국의 6대 교역상대국으로 도약하였다. 또한 한국의 대중 투자도 1992년 1억 4천 1백만 달러로 급증, 중국은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 138) 이와 관련, 중국 대외경제무역합작부와 외교부는 최근 한국에 대한 경제무역정책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① 단둥과 연변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 허가 ② 상해시와 요녕 산둥성 일대의 토지개발에 대한 한국기업의 참여 허가 ③ 한국금융기관과 중국 대외무역업무 결제기관간 교류 허가 ④ 한·중간 관세와 검역 등 분야의 협력 허가 등이다. 『經濟導報』, 總2317期 (1993. 5. 3), pp. 26~27.

국으로서는 지역경제 강국으로 부상한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의 노동력과 자원 그리고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결합될 경우 양국의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기여가 기대된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은 산업구조상 많은 분야에서 상호 경쟁적인 면을 지니고 있는 바, 한·중간 경제적 마찰이 야기될 소지도 있다.

중국은 또한 장기적으로 한국을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증대에 대한 견제카드로 활용하고자 한국과의 정치적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구소련의 붕괴와 미국의 전략 재조정 이후 아·태지역에서 일본이 전개하고 있는 적극정책은 동 지역에서의 중국의 이익에 배치되는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일본과 협력관계 유지를 희망하면서도 정치·군사적으로는 일본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역내에서 일본의 역할증대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역내국가에 대한 선린우호협력관계 확대·심화와 해·공군력을 중심으로한 군사력 현대화라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신장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역내에서 일본이 정치 및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할 경우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이 증대될 것인 바, 중국은 한국과 정치·군사적 협력관계까지도 모색·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3. 한국의 대응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경제력을 강화

하고 군사력을 증강할 경우, 이는 동북아 신질서 구축과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한반도문제 해결과정 및 한반도 통일이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중국이 동북아의 군비통제, 경제발전 및 환경보호 등 안정과 번영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따라서 안정적인 주변환경속에서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동시에 한국 주도하에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국정부는 정치·경제·군사적으로 강대한 중국의 출현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이와 관련, 한국정부는 중국의 개혁 개방이 역내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중국의 경제·군사 강대국화가 역내안정과 한반도 통일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안보 및 경제적 차원의 대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첫째, 동북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증대는 중·일간 경쟁을 심화시키는 등 한반도 주변 4강간 세력균형 변화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 경쟁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은 미, 일과 긴밀한 안보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중, 러 등 지역국들과도 안보협력관계 구축을 모색함으로써 지역문제 해결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문제에 대해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변 4강에 대한 균형적이며 능동적인 안보협력 구축 노력을 통해 한국은 역내에서 국제적 위상

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며, 한반도문제의 한국화를 유도하고 한국주도하에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은 군사 현대화를 통해 국방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최근 역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다자안보협의체 형성 노력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중국의 군사위협을 견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승주 외무장관이 천명한 바와 같이 아·태지역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다자안보협의체가 형성되기에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인 바,¹³⁹⁾ 우선 동북아 소지역 차원의 다자안보대화를 모색함으로써 중·일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군비경쟁 등 역내질서 불안요인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 다자간 안보협의체 형성과정에서 북한의 동참을 유도함으로써 북한을 국제질서 안정세력으로 순화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중·북한간 유대관계를 고려해 볼 때,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경우 중국의 대북한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국에서 개혁·개방에 따른 부작용이 심화되고 중국의 대서방 관계가 악화될 경우 중국내 보수파의 입지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내 보수파의 영향력 확대는 중국으로 하여금 대외문제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견지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정국의 보수화는 대북한 군사원조 지속 등 중·북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親韓的이

139) 한승주, “한국 신외교의 기초 — 세계와 미래지향의 신한국 외교,” 외교협회주최 오찬회 연설문, p. 14.

며 대외협력 지향적인 중국내 개혁파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도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성공하여 경제력을 발전시킬 경우 한·중간 경제협력이 증대될 것이나, 경쟁관계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상품이었던 섬유제품 등 노동집약 산업은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며, 중국산 농수산물과 값싼 경공업 제품의 수입이 급속하게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중국시장 확보를 위한 한·일간 경쟁이 야기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의 기술과 부품에 의존하여 생산된 상품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할 경우 한·중간 경쟁 전망은 그다지 낙관적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무엇보다도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새로이 형성될 동북아 경제질서속에서 한국의 경제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중국보다 고도화된 산업구조를 통해서만이 한·중간 경제적 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일본에 버금가는 기술개발에 의해서만이 중국시장에서 일본상품과 경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중국경제에 대한 북한경제의 의존도로 볼 때, 중국의 개혁·개방 가속화는 중국 뿐만 아니라 북한 등 아시아지역 사회주의 국가들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편입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중국과 북한의 경제개혁·개방은 장기적으로

로 정치체제 변화까지도 유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남북한간 경제통합 등 역내 신경제질서 형성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중국의 개혁·개방이 북한의 경제개혁·개방으로 이어지도록 중국과 공동 노력을 경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한국의 대중 경제협력은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고 남북한간 교류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지역경제협력의 틀 속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중국이 한국의 경제경쟁 상대국이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정부는 국내기업의 무분별한 對中 투자를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과의 경협도 중·장기적 차원의 대중 경제관계를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중국의 개혁·개방 가속화와 이에 따른 국력 증강이 한반도의 안정 유지와 평화적 통일 실현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의 일환으로서 한·중 정기각료회의 추진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중국과의 공식 협력채널을 통해 한국정부는 중국의 개혁·개방 가속화에 따르는 지역안보, 경제 및 환경문제 등을 원만하게 처리하는 동시에 한국 주도의 평화적 통일이 중국의 이익에 결코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參 考 文 獻

1. 단행본

申相振.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黃炳茂. 「新中國軍事論」. 서울: 法文社, 1992.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十三大以來重要文獻選編」. 中卷. 北京: 人民出版社, 1991.

屈全繩, 劉紅松 編. 「和平演變戰略及其對策」. 北京: 知識出版社, 1990.

鄧小平. 「建設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 香港: 三聯書店香港分店, 1985.

———. 「鄧小平文選(1975-1982)」. 北京: 人民出版社, 1983.

劉國光 等. 90年代中國經濟發展與改革探索. 北京: 經濟科學出版社, 1992.

魯凡之. 「中國經濟改革與調整」. 香港: 銀域有限公司, 1986.

德田教之 編. 「中國政治の中長期展望. NRS-84-12」. 東京: 日本國際問題研究所, 1987.

Barnett, A Doak. and Clough, Ralph N. eds., *Modernizing China: Post-Mao Reform and Development*. Boulder, Colo.: Westview Press. 1986.

Harding, Harry. *A Fragile Relationship: The United States and China since 1972*.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2.

Jacobson, Harold K and Oksenberg, Michel. *China's Participation in the IMF, the World Bank, and GATT*.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0.

Segal, Gerald. ed., *Openness and Foreign Policy Reform in Communist States*. London: The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1992.

2. 논문

한승주. “한국 신외교의 기초 — 세계와 미래지향의 신한국 외교.” 외교협회주최 오찬회 연설문 (1993. 5. 31).

瑞昌. “中國學者的 韓國觀.” 「中蘇研究」, 第16卷 第4號 (1992/3 겨울).

丁樹範. “論四十餘年來共軍的發展.” 「中國大陸研究」, 第35卷 第12期 (1992. 12).

王和興. “90年代世界經濟的大趨勢.” 「國際問題研究」, 1993年 第2期 (1993. 4).

田眞. “外交部對中美關係的秘密報告.” 「爭鳴」, 1992年 11月號 (1992. 11).

林長盛. “論中共軍隊參與經濟活動的影響.” 「中國大陸研究」, 第

36卷 第3期 (1993. 3).

李鵬, “政府工作報告.” 「文匯報」, 1993. 3. 16.

李琮, “風雨飄零又一年.” 「瞭望」, 1992年 第49期 (1992. 12. 7).

李長久, “世界主戰場轉向經濟領域.” 「文匯報」, 1993. 1. 1.

江澤民, “加快改革開放和現代化建設步伐, 爭取有中國特色社會主義事業的更多勝利.” 「文匯報」, 1992. 10. 13.

江遙, “中國為何增加軍費?” 「爭鳴」, 1993年 1月號 (1993. 1).

吳安家, “中共「十四大」修改黨章的政治意涵.” 「中國大陸研究」, 第36卷 第1期 (1993. 1).

吳敬璉, “計劃與市場理論探索十四年.” 「瞭望」, 1992年 第46期 (1992. 11. 16).

萬光, “九十年代亞太格局的演變.” 「瞭望」, 1992年 第44期 (1992. 11. 2).

邱榮金, “從江澤民的日本之行看中共與日本的關係.” 「問題與研究」, 第35卷 第7期 (1992. 7).

唐天日, “兩種不同的人權觀.” 「文匯報」, 1993. 6. 14.

唐貞浩, “關貿總協定的基本情況及與我國的歷史關係.” 「瞭望」, 1992年 第42期 (1992. 10. 19).

曾樹基, “當前中國經濟存在什麼問題.” 「廣角鏡」, 1992年 12月號 (1992. 12).

陳莊, “中國的對外開放與東亞經濟.” 민족통일연구원 주최 제1차 한·중 학술 회의 발표논문 (1993. 6. 29 30).

張伍, “中國改革: 出現有利時期步伐將要加快.” 「經濟導報」, 總

2251-2期 (1992. 1. 1).

張忠義. “探索亞太經濟合作的新模式.” 「瞭望」. 1993年 第23期
(1993. 6. 7).

張武. “朝鮮半島局勢發展的前景.” 「國際展望」. 1993年 第1期
(1993. 1. 8).

張朝尊·文力. “論社會主義市場經濟.” 「中國社會科學」. 1992年
第4期 (1992. 7).

張寵. “中國現代化若干目標分析.” 「中國社會科學」. 1992年 第3期
(1992. 5).

張鎮邦. “大陸各種經濟成分比重分析.” 「中國大陸研究」. 第35卷
第11期 (1992. 11).

張毅. “中國大步邁向世界貿易強國.” 「瞭望」. 1993年 第20期
(1993. 5. 17).

趙紫陽. “沿着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建設.” 「明報」. 1987. 10. 26.

關文亮. “美因素如何影響臺局.” 「文匯報」. 1993. 2. 4.

廣碧華. “鄧小平的開放戰略.” 「廣角鏡」. 1992年 3月號 (1992. 3).

鄭言思. “1992: 靈活務實的中國外交.” 「瞭望」. 1992年 第51期
(1992. 12. 21).

譚取榮. “複雜多變的國際形勢.” 「瞭望」. 1992年 第49期 (1992.
12. 7).

Buszynski, Leszek. “ASEAN security dilemmas.” *Survival*. vol. 34,
no. 4 (Winter 1992/93).

Chen, Qimao. “New Approaches in China’s Foreign Policy: The

- Post-Cold War Era." *Asian Survey*. vol. 33, no. 3 (March 1993).
- Glaser, Bonnie S. "China's Security Perceptions: Interests and Ambitions." *Asian Survey*. vol. 33, no. 3 (March 1993).
- Chen, Jingbiao . "Asia-Pacific Economic Ties Grow Closer." *Beijing Review*. February 8~14, 1993.
- Harding, Harry. "China at the Crossroad: Conservatism, Reform or Decay." *Adelphi Papers*. no. 275 (March 1993).
- Huang, Yasheng. "China's Economic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its Political and Security Roles." *Adelphi Papers*. no. 275 (March 1993).
- Hyer, Eric. "China's Arms Merchants: Profits in Command." *China Quarterly*. no. 132 (December 1992).
- Jia, Hao and Zhuang Qubing. "China'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Asian Survey*. vol. 32, no. 12 (December 1992).
- Klare, Michael T. "The Next Great Arms Race." *Foreign Affairs*. vol. 72, no. 3 (Summer 1993).
- Li, Luye. "Current Situation in Northeast Asia." *Beijing Review*. August 19~25, 1991.
- Li, Zhongcheng and Guo, Chuanling, "World Trends 1993."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vol. 3, no. 1 (January 1993).

- Liu, Huaqiu and Yang, Chengxu. "Creating a Peaceful International Environment." *Beijing Review*. November 30 December 6, 1992.
- Sutter, Robert G. "China in World Affairs — Background, Prospects and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CRS Report for Congress*. 92-747S (October 1, 1992).
- Wu, Naitao. "1992: From Planned to Market Economy." *Beijing Review*. January 11~17, 1993.
- . "Eight Major Tasks For Reforms in 1993." *Beijing Review*. March 8 14, 1993.
- Xu, Zhixian. "Sino-Japanese Relations Continue Enhanced." *Beijing Review*. October 12~18, 1992.
- Zhang, Zhiping. "Reform of China's Financial and Accounting System." *Beijing Review*. December 7~13, 1992.

3. 기타

「東亞日報」.

「世界日報」.

「朝鮮日報」.

「文匯報」.

「人民日報」.

「光明日報」.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公報」.

「經濟導報」.

「明報」.

「世界週報」.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China News Analysis.

Daily Report, China.

Sipri Yearbook, 1991.

Business Week.

빈 면

● 發刊資料目錄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北韓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 (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 (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的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 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化와 東北亞秩序 : 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 (IV)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
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
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綜合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 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10대 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1992. 9. 30)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1992. 12. 31)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1993. 3. 31)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1993. 6. 30)

〈年例情勢報告書〉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論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
(1992)

〈資料〉

92-01 統一 吳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吳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 單行本 研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化와 東北亞秩序
-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Ⅳ -

研究報告書 93-04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9252 , FAX : 232-5341

印刷處 양동문화사 전화 : 272-1767

印刷日 1993년 8월 일

發行日 1993년 8월 일
